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9. 3.

교육위원회

목 차

I . 감사개요	1
II . 주요 감사실시 내용	7
1. 교육부 및 소속기관	7
2. 시 · 도교육청	71
【공통사항】	71
【서울특별시교육청】	73
【인천광역시교육청】	77
【경기도교육청】	79
【대전광역시교육청】	81
【대구광역시교육청】	83
【강원도교육청】	85
【경상북도 교육청】	87
【충청남도교육청】	88
【충청북도교육청】	89
【경상남도 교육청】	90
【광주광역시교육청】	92
【울산광역시교육청】	94
【부산광역시교육청】	96
【전라남도교육청】	98
【전라북도교육청】	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4

3.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107

【공통사항】	107
【경북대학교】	108
【전북대학교】	109
【부산대학교】	110
【강원대학교】	111
【경상대학교】	111
【전남대학교】	112
【충남대학교】	112
【충북대학교】	113
【제주대학교】	1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3
【서울교육대학교】	1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120

4.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122

【공통사항】	122
【서울대학교병원】	123
【부산대학교병원】	126
【강원대학교병원】	126
【전북대학교병원】	127
【충남대학교병원】	127
【경상대학교병원】	127
【경북대학교병원】	128
【전남대학교병원】	128
【충북대학교병원】	128
【제주대학교병원】	129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2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29

5.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30
【한국사학진흥재단】	13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31
【동북아역사재단】	13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3
【한국연구재단】	134
【한국장학재단】	135
【한국학중앙연구원】	138
【한국고전번역원】	13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42
【한국교직원공제회】	14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3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47

1. 교육부 및 소속기관	147
2. 시·도교육청	174
【공통사항】	174
【서울특별시교육청】	174
【인천광역시교육청】	178
【경기도교육청】	180
【대전광역시교육청】	183
【대구광역시교육청】	185
【강원도교육청】	187
【경상북도교육청】	190
【충청남도교육청】	191
【충청북도교육청】	193
【경상남도교육청】	194

【광주광역시교육청】	197
【울산광역시교육청】	199
【부산광역시교육청】	201
【전라남도교육청】	203
【전라북도교육청】	2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9
 3.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212
【공통사항】	212
【경북대학교】	213
【전북대학교】	214
【부산대학교】	215
【강원대학교】	215
【경상대학교】	216
【전남대학교】	216
【충남대학교】	216
【충북대학교】	217
【제주대학교】	2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17
【서울교육대학교】	2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1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22
 4.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223
【공통사항】	223
【서울대학교병원】	224
【부산대학교병원】	225
【강원대학교병원】	226

【전북대학교병원】	226
【충남대학교병원】	226
【경상대학교병원】	227
【경북대학교병원】	227
【전남대학교병원】	227
【충북대학교병원】	227
【제주대학교병원】	228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28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28

5.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229

【한국사학진흥재단】	22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30
【동북아역사재단】	23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31
【한국연구재단】	232
【한국장학재단】	233
【한국학중앙연구원】	236
【한국고전번역원】	23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3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38
【한국교직원공제회】	23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39

IV. 국정감사 증인 · 참고인 현황 241

1. 기관 증인 241

2. 일반 증인 · 참고인 244

I.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입법기능, 재정통제 등의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18년 10월 11일(목) ~ 10월 30일(금) :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교육부 소관(63개)
 - 위원회 선정기관(58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립특수교육원 (4) 중앙교육연수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국립국제교육원 (7)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8) 강원대학교 (9) 경북대학교 (10) 경상대학교 (11) 부산대학교 (12) 전남대학교 (13) 전북대학교 (14) 제주대학교 (15) 충남대학교 (16) 충북대학교 (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8) 서울교육대학교 (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2호 대상기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인천광역시교육청 (4) 광주광역시교육청 (5) 대전광역시교육청 (6) 울산광역시교육청 (7) 대구광역시교육청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9) 경기도교육청 (10) 강원도교육청 (11) 경상남도교육청 (12) 경상북도교육청 (13) 전라남도교육청 (14) 전라북도교육청 (15) 충청남도교육청 (16) 충청북도교육청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개
제3호 대상기관	(1) 강원대병원 (2) 경북대병원 (3) 경상대병원 (4) 부산대병원 (5) 서울대병원 (6) 전남대병원 (7) 전북대병원 (8) 제주대병원 (9) 충남대병원 (10) 충북대병원 (11)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2) 부산대치과병원 (13) 서울대치과병원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 한국장학재단 (17) 한국고전번역원 (18) 동북아역사재단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2) 한국연구재단	22개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5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4호 대상기관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 한국교직원공제회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5개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p>◇ 위원장 : 이찬열</p> <p>◇ 위원 : 조승래(더불어민주당)</p> <p>김해영(")</p> <p>박경미(")</p> <p>박용진(")</p> <p>박찬대(")</p> <p>서영교(")</p> <p>신경민(")</p>	<p>◇ 위원 : 김한표(자유한국당)</p> <p>곽상도(")</p> <p>김현아(")</p> <p>이군현(")</p> <p>전희경(")</p> <p>홍문종(")</p> <p>◇ 위원 : 임재훈(바른미래당)</p> <p>(15인)</p>
사무보조자	<p>◇ 위원회 직원(13인)</p> <p>－ 수석전문위원 정재룡</p> <p>－ 전문위원 채수근</p> <p>－ 입법조사관(3급) 정홍진</p> <p>－ 입법조사관(4급) 정미야, 이정운</p> <p>－ 입법조사관(5급) 박나경, 구희재, 안병후</p> <p>－ 입법조사관보 진애란, 김태은</p> <p>－ 주무관 이은희, 안병연, 고윤경</p>	<p>◇ 의원보좌진(15인)</p> <p>◇ 정책연구위원</p> <p>－ 오기형(더불어민주당)</p> <p>－ 김진수, 이건용(자유한국당)</p> <p>－ 김지영(바른미래당)</p> <p>◇ 속기주무관</p> <p>－ 박정현, 권오정, 안상훈, 손아영, 양세희</p>
총 52인		

5. 감사 일정 및 장소

□ 총 국감기관 수: 63개 기관

【실제 감사: 총 8일】

※ 현장시찰 1일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11(목)	10:00	<u>교육부</u> (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7개 기관)	국회		
10.12(금)	10:00	<u>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u> <u>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u>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 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12개 기관)	국회		
10.15(월)	10:00	<u>서울시교육청</u>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	국회		
10.16(화)	감 사 준 비				
10.17(수)	10:00	<u>대전광역시교육청</u>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6개 기관)	국회		
10.18(목)	감 사 준 비				
10.19(금)	10:00	<u>경상남도교육청</u> ,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8개 기관)	경상남도 교육청	KTX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 수 단	비고
10.22(월)	10:00	현 장 시 찰			
10.23(화)	10:00	<u>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u>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7개 기관)	국회		
10.24(수)	감 사 준 비				
10.25(목)	10:00	<u>부산대학교</u> ,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개 기관)	국회		
10.26(금)	감 사 준 비				
10.29(월) ~10.30(화)	10:00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진한글씨로 밑줄친 기관은 대표 증인선서 기관임.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교육부 및 소속기관

<일반 사항>

- 사회부총리를 역임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가 경제부총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의 경우 국무총리가 의장인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간사를 맡고 있고, 지원인원이 82명,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보가 간사를 맡고 지원인력 107명, 이에 비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이 간사를 맡고 지원인력도 12명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
- 장관 임기 동안 교육부 폐지를 준비하는 게 나은 것 아닌지
-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차대한 일정이 장관의 정치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는 지적
- 교육부가 교육관련 법령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등 대한민국 모든 교육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필요
- 정치권에서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부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최소한 이렇게 말해야 할 필요
-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교육부의 의견이나 정책이 쉽게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교육부의 신뢰를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
- 장관 취임식에서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지만 연이은 과속 교육정책 추진에 우려

- 과급력이 큰 교육정책에 대하여 충분한 내부협의, 관련부처 협의, 국회 협조, 협의 등 법 개정, 재원마련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추진을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취임 이후 이틀만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협의를 나눴는지
- 언론에 교육부 공무원들이 “공식 방침은 취임식에서 처음 들었다”, “장관 얘기 듣고 정책이 공식결정된 걸 알았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의 경우 애초 정책숙려제를 통하여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이전 발표와 달리 정책숙려제를 거치지 않고 금지 완화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지적
- 유치원 방과 후 영어과정에 대하여 장관이 10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허용한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사전에 장관과 담당 국장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지
- 유치원 방과 후 영어과정 정책숙려 관련 용역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책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조기에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왜 입찰 마감까지 기다리고 나라장터에 용역 게시를 한 것인지
- 고교무상교육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장관이 발표한 것인지
-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후 취임식까지 2시간 40분 동안 담당공무원이 장관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협의를 나눴는지
-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애초 2020년부터 하기로 하였지만, 장관 취임사에서 이를 1년 앞당긴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재원마련 방안 등

충분한 사전준비나 교육부와의 소통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닌지

-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가 10월 2일에 있었는데, 그날 교육복지정책과는 무상교육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소요예산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했고, 이는 허위보고 아닌지, 이에 책임질 필요
- 교육부 산하기관·유관기관의 임명직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상임감사, 감사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소위 말하는 캠퍼더 인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등의 인사가 48명 비율로 치면 20%로 상당히 많음을 지적
- “공공기관 인사에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대원칙으로 삼고 저에 대한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 등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러한 원칙과 달리 교육부에서 캠퍼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전임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모는 현 정부가 보다 더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적폐다라고 지적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
- 교육부장관의 국회의원 사무실 피감기관 입주와 관련하여, 장관후보자로 임명된 후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통보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
-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우석대학교 전임강사와 겸임 조교수로 2011년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재직하였다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 한 학기 강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우석대 또는 허위 경력 증명서를 내주는 학교들에 대하여 전수조사 필요
- 유은혜장관은 2011년 말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자서전 ‘어머니의 이름으로’에 우석대 겸임교수, 2012년 총선 공보물에 우석대 겸임강사, 2012년 의정보고서에 겸임 전임강사로 적었고, 2012년 우석대 겸

임강사 시절 19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마주친 심사위원장이 강철규 우석대 총장이며, 2012.11.6. 서창훈 우석대 이사장과 인재근, 홍익표 의원과 함께 미얀마 수치 여사를 만난 적이 있음을 지적

- 허위경력자에게 교수자리를 남발하는 대학에 대하여 즉각 감사에 나서고, 허위 경력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임용무효,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 필요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우석대에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얼마나 발급하였는지, 다른 사립대는 어떠한지 등 전수조사와 함께 교육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하고,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 학교신뢰도가 99년 32.7%에서 2017년 15%로,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동 기간 34%에서 19.7%로 낮아졌는데, 이러한 신뢰도 저하는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포함한 여러 노력 필요
-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당시 교육부 내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좌천되거나 사표를 중용받은 일명 국정교과서 추진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지적
- 2015년 교육부는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중 3,126명의 전교조 교원에게 징계를 처분하였지만,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이익처분 취소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대전, 울산교육청 1,206명의 교원에 대하여 철회 또는 철회권고가 이루어졌는데, 대전, 울산 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행정처분 등을 당한 교원들의 처분 철회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행정처분 철회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행법상 전교조 전임자로 하겠다고 휴직을 할 수 없는데, 2018년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신청하여 휴직하고 있는 사람이 30명으로, 이는

불법임을 지적

-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은 불법으로,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진취소 요청 1회하고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에 대하여 법에 따른 강제이행명령, 직권면직 등 불법상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부의 조치가 필요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라고 했던 부분을 해결하려고 권고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화 등을 지켜볼 필요
- 전교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재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 2018년 9월 기준으로 17명의 교육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사립대학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하면 11명의 평균 연봉이 약 9,000만원에 달하며, 그 중에는 교육부 차관 출신, 교육부 장관 출신도 있음을 지적
-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사립대학의 석좌교수 등 교원으로 가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우려
- 교육부 고위공무원 중 2014년 3월 31일 퇴직하고, 2014년 4월 1일 사립대학에 재취업을 한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교육부 재직 시 자신이 재취업할 사립대학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 노력했을 우려
-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한 선배 공직자들의 청탁을 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하고, 재취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
-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 교육부는 2013년 12월 ‘전자태그 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담으로 관계 IT기업 설명회,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일선 교육현장에는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에듀파인 및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일선교사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부가 이를 일선 교육청에만 맡기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
-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 탐지대책 관련
 - 과기부나 고용부는 관제직원 1인당 평균 4개 기관을 담당하는데 비해, 교육부 산하 사이버안전센터는 위탁 보안관제요원 34명이 총 442개 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이어서 업무 과중이 아닌지
 - 사이버공격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비해 요원 대부분이 초급수준이어서 고급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 국가기관 대상 1달에 2건 이상 도청이 적발되고, 1회성 도청탐지활동으로는 색출이 불가능하도록 탐지회피 기능을 갖춘 도청기들이 일반화된 상황으로, 부총리는 1회성 도청탐지활동의 한계 및 이에 대비한 130개 이상의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적시된 중요 장소들에 도청탐지설비를 구축·운용 중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1회성 도청탐지활동만 수행하고 있는지
- 도청탐지설비의 구축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앞으로의 보완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안전공제회 등 교육분야 재난안전 관련 공제회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난립하고 있고, 보상기준이 단체마다 상이해 학부모 피해가 우려되며,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 교육부의 업무처리 방식을 보면, 미투사건의 경우 초·중등 따로, 일반대, 전문대 따로 구분하고, 학교폭력의 경우 시·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고 교육부가 집계를 하는 수준, 자살문제도 마찬가지로, 자주 듣는 답변이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등 다른 부처 담당이라고 하는 등 업무를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
- 학생고민상담제도, 학생자살 대책, 성 관련, 체험중심 안전교육, 보건

교사 배치, 장애학생 인권문제, 코딩교육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교육부는 슬로건 부, 떠넘기기 부가 아닌지 지적

- 3無(무능력, 무책임, 무기력)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 필요
-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교원 징계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 취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매년 다른 수치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교원 징계의 연장선인 소청과 소송 현황 자료 또한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징계, 소청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아동학대 처벌 관련 통계, 성비위사건 통계, 교원징계·소청·소송 현황과악 등 교육정책마련에 필요한 기본통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
- 학교는 아동학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신고현황 등을 복지부 소관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부도 관리할 필요
- 학교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이버교육 1시간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사학비리를 고발한 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에 대하여 두 차례 직위해제와 파면이 있었고, 학원비리를 제보한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또한 2016년 한해동안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았으며, 수원대 비리의혹 제보한 손병돈 교수도 4년 동안 세 차례나 해직을 당하는 등 학교 징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익제보자 보호장치에 대해 현재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익제보교사가 부당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조례나 교육규칙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나, 시·도마다 위원회 구성이 상이하며, 특히 민간 위원 참여 여부가 다른데, 민간위원은 법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

- 과학기술분야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장기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것처럼 경제적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인문사회분야도 학술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
- 실내온도 확인 등 맞춤형일자리 업무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비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되어야 하는데,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맞춤형일자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탈북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데, 지속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며 대학교육을 중도포기하더라도 직업·평생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국정과제인 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사업계획 마련이 부진하다는 지적
- 급격한 사회변화와 계층·세대·성별 갈등이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 육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이 없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필요
- 스쿨 미투에 대한 2차 가해는 별건으로 징계하고, 성범죄 징계시효가 지나더라도 수업배제 등의 대안을 고려하며, 경북대 사안과 같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내게 꼭 맞는 혜택, 교육지원 한눈에’ 서비스를 2018년 3월 시작했으나, 이용자수가 반년 만에 1/30로 줄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공공

- 기관은 구매액의 일정비율(1% 이상)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76%), 176개 교육지원청 중 131개(74%)에서 우선 구매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우선구매율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
 -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시 소재 축산품질평가원의 경우 축산학과 졸업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축산학과가 없어 지역인재 채용이 어려운 반면 인근 대전과 충남 학생은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발전 방안에 대한 협력 필요
 - 대다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권고수준 이상 채용하고 있음에도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실정으로, 지방대생 채용확대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안이 필요
 -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폭력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245,341명으로 전체 5대 범죄자 252만 2,640명 중 청소년이 9.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절도사건 53만 1,454명 중 청소년이 12만 7,749명(24.0%)으로, 청소년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 교육부는 범법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부총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 작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인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료기록의 청와대 무단 유출, 금품 수수 등의 중심에 서있는 서창석 원장 해임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미 기관운영감사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2017년 7월 3일부터 19일까지 한 병원 전반에 대한 감사였고, 서창석 병원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것은 아님을 지적

- 최근에 백남기 농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대병원 측에서 정보기관, 청와대하고 수시로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들이 확인되었지만, 서창석 병원장은 이를 계속 부인해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
- 2016, 2017년 국정감사 때 서창석 병원장의 위증 의혹 제기
- 현재 교육감선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해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외국에 가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든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대학 교원들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학교 자율로 맡기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 단위 학교에서 교사 선발을 할 수 있고, 커리큘럼을 조정할 수 있고, 월급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이나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 교육부가 국보법 사범 4명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인천 교육감이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교육부는 인천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제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은 이를 위반하여 내부규정을 통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
-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사무직원”과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계가 모호하여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자가 사학연금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사학연금 가입 시 단기간 근로자는 여러 불이익이 있는

반면 사립학교 법인 등은 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사학연금이 비정규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매해 사학연금 탈퇴자 중 2년 미만 근로자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학연금 가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지적

○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교육부의 개편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를 출범한다면 업무·역할 중복 발생 우려가 있고, 옥상옥 우려를 피하기 위한 교육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 국가교육위원장의 위상·권한, 실제 정책집행 권한 주체, 교육부 권한 축소 방안,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할지, 대통령 자문기구로 할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소관사무범위 등 교육부의 업무·역할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단절의 무한반복으로,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필요
- ‘대입개편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국가교육회의의 본래 목적은 교육 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국가교육회의는 거시적인 교육 비전을 검토·제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데 향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계획인지

○ 공론화위원회 관련

-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맡긴 것은 복잡성, 전문성, 책임성, 지속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론화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물었고 이에 대하여 선거여론조사 때 쓰는 번호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선거여론 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선거여론조사 목적일 때만 가상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선거여론 조사와 무관하기에 가상번호 사용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

- 공론화위원 6명 중 절반이 한국갈등학회 소속인데, 인사가 편중될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움을 지적
- 교육부 전문분야임에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교육 문제를 넘기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교육문제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시 교육부의 의견도 들어야할 필요
- 공론화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듣는 것은 바람직하고 중요 참고사항이기는 하나, 학부모 또한 이해관계자 이므로 금과옥조처럼 여기지 않아야 할 필요
- 대통령 공약은 수능시험을 절대평가화하겠다고 한 반면, 공론화위는 정시모집 비율 30%이상을 권장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교육정책과는 반대되는 것 아닌지, 대통령 교육정책 공약과 반대 방향으로 국민들의 공론화가 형성된 것 아닌지
-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향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
- 탈원전 같은 이슈는 비교적 찬반이 명확한 의제이나, 교육정책은 매우 복잡한 현안으로, 소통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공론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책임이 분산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책임회피수단으로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최소한 답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나, 답이 몇 개로 제한되어 그 중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공론화를 할 수 있겠지만, 답이 무한대로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
- 정부의 중점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 등 명확한 방향을 세우고, 이와 연동할 수 있는 대입전형을 모색한 뒤, 그 안에서 시민들의 의

- 견을 묻는 것이 더 적합한 소통방식이 아니었는지
- 교육부가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할텐데,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필요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공약은 우리 국민의 의견과 괴리되어 있다. 공약도 국민의 의견과 괴리되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공론화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평가를 더 강화해야 하는 방식으로 수능 시험을 30%이상 반영하라는 권고를 한 마당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 공약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 대통령은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장기적으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단장은 국민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나 조치가 필요

<유아 및 특수교육 관련>

○ 유치원 회계비리 관련

- 유치원 감사결과 전국 1,912개 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751개 유치원에서 5,72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고 액수로는 256억 8,643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
- 유치원 회계부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적선물구입, 자녀학비 등 기관운영비를 개인경비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적발
- 유치원 회계 관련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관심 뿐 아니라 교육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함을 지적
-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교사처우개선비, 담임 수당 등 연 2조원에 달하는 국가세금도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유치원마다 다른 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불투명한 회

계인식으로 인해 회계감독이 어려웠다는 지적

- 교육부는 이미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복지부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점검해 유치원의 방만한 운영을 확인하고 근절방안·대책을 마련했으나, 당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했다면 2018년에 이와 같은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
- 유치원에 대한 정기 감사가 없었고, 시·도별 감사 횟수, 감사 기준 등 감사에 있어서 격차가 있는 등 현재의 감사 시스템이 부실함을 지적
-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권리라는 공익적 부분을 고려하여 이들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할 필요
- 회계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앞으로 교육부가 책임 있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유치원 공시사항에는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부 2018년도 유치원정보공시지침서는 시정명령을 1회 요구하고 즉시 이행하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2018년 시·도교육청이 비리유치원으로 명단을 공개한 유치원 대다수가 유치원 알리미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어 교육부가 유치원 관리·감독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
- 유치원에도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감사가 필요하고,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에 맞추어 에듀파인 등의 국가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
-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감사관 1,2명이 200,300개 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담당하는 등 감사인력 부족 문제, 혹은 유착 의혹 등의 문제가 있기에 시민감사관제도가 더 활용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교육부도 제도 관련 사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역할을 다 할 필요

- 2019년도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겠다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재원과 인력 확대에 대해 부처, 교육청, 지자체간 협의를 이룬 것인지
-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의 신설, 유지관리 비용을 추계하고 재원수급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적역할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법률·제도 마련 필요
- 현재 한유총은 이사장이 궐위상태도 아니고, 정관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여 전권을 위임하도록 되어있지 않아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표한다고 보기 부적절하다는 지적
- 사립유치원 비리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의 부도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자격제한을 강화할 필요
- 재무회계 규칙이 정비되지 않아 단죄하기 어렵다는 지적
- 일부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공적사용료 또는 시설사용료 지원은 강제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데 따른 것인데,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갖추어 제공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
- 민간투자사업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이어서 역시 사립유치원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리더스유치원의 숲체험장 계약 등의 사례를 볼 때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낸 비용 중 상당부분이 사립유치원 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수익이 되었다는 지적
- 사립유치원 토론회에 유치원당 참여인원을 할당한 것은 사실상 단체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

○ 유치원안전 관련

-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전 날 진행한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안전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참석자가 있음에도, “하루 빨리 건물을 올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변이가 왔으면 안전진단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불안하시겠지만 이상 없습니다” 등의 발언이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어

면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인지

- 서울시교육청 전수조사에 따르면, 대형공사장이 바로 옆에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42곳 중 15곳이 특이사항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학교 부근의 공사로 인하여 학습권이 침해되고,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는 것은 큰 문제임을 지적
- 상도유치원으로 돌아간 122명의 원생들은 상도초 교육과정반과 방과후과정반으로 배치되어 교육받고 있고 정서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나, 낮은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교육 정상화에 무엇보다도 노력할 필요
- 서울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 특이사항으로 분류된 15곳의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점검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 필요
- 교육시설기본법안이 기존의 시설물안전관리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타 부처와 논의는 해보았는지,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으로,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조금 더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
- 「사립학교법」 상 원칙적으로 교육용재산의 매도는 금지되나, 현재결정예 및 법제처 해석상 ‘학습권이 보장되는 경우’ 사립유치원 운영권의 양수·양도가 허용되는데, 경기교육청은 법률 개정과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느라 설립자 및 대표자 변경승인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유치원이 재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명의 학생 중 25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 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 있음을 지적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지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을 밝히지 못해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
-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 배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되며,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내야하는 특수학교에서 관계자들에게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참담한 일로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전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한 조사방식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노력할 필요
- 특수학교 공립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모든 특수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어 교사 순환발령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

○ 특수학교 설립 관련

- 현재 일반학생 대상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학교는 없는 실정이고, 일반 예술중·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일반 특성화고에는 378개 특수학급(3.4%)을 운영 중이나, 장애학생은 특성화고 전문 실습설비나 기자재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
-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장애학생 수요를 고려한 전국단위 모집의 예술, 직업 특성화학교 설립에 나설 필요

<초·중등교육 관련>

○ 학제개편 관련

-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 중 하나로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부총리는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 공교육 12년을 입시 하나에 쏟아 부으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교육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분리하여 맞춤형으로 교육을 정교히 다듬고, 동시에 교육기간을 단축해 사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그 비용을 학생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대학교 4년 정도로 학제를 개편하면 2년 동안 들어갈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정부도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여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를 갔다 와도 대학에 가는 나이라, 한 번 더 발돋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이런 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필요
- 학제 개편은 교육 전반의 개혁, 사회 전반의 변화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여태까지 제기된 다양한 학제 개편안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적극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필요

○ 고교 무상교육 관련

- 2017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학생 15,617명, 미납액은 66.6억원, 미납학생 1인당 평균 42만 6천원 미납, 2016년 미납학생 11,700명, 미납액은 73억원 초과, 미납학생 1인당 평균 62만 5천원 미납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한부모·농어업인·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 전체 학생의 40% 이상의 고등학교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이 상당수 존재,

미납사유 파악 등 실태조사 필요

- 고교진학률이 99.9%에 달하므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
-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 필요
- 국·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은 평균 월 13만원 정도로 고교무상교육 실현되면 고등학생 1명을 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연간 약 156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급식비와 교복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
- 대안학교는 현재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기회균등이나 보편타당의 원칙에 따라 예상되는 1인당 무상교육 지원금인 156만원 정도의 지원이 대안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 당초 목표보다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이므로, 2019년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하기 위해 예산 추가확보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즉시 전면 시행하여야 할 필요
- 고교 무상교육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실시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노력할 필요
- 무상교육이라는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논의되는데, 무상교육뿐 아니라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부모들의 책임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고교 무상교육을 정확히 언제 시행할 것인지, 내년 2학기부터 시행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 무상교육에 대하여 기재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 단순히 무상교육을 추진할 뿐 아니라 다문화·탈북민 교육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 등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당부

○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관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에게 묻지 않고 추진되는 교육정책이라는 점, 제도의 일괄 시행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사교육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귀가 시간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은 초등교육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제이므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의향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제안은 교육부와 어느 정도의 조율을 마친 내용인지,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언제쯤 결정되는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수요자의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관련

- 유치원에서처럼 체험위주의 영어교육이 초 1,2학년들에게도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명확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필요
-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했다가 거센 반대 목소리에 부딪치자 판단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발을 빼버린 것은 문제로, 설익은 정책을 불쑥 던지고 오락가락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 지적
- 공교육 틀 내에서 영어수업을 무작정 금지할 경우 교육수요가 사

교육으로 이동할 우려가 큰데, 고액의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몇 만원 짜리 방과 후 수업만 금지한다면 이는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라는 풍선효과가 생길 우려

-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이 높은 만큼 이런 수요에 눈 감은 채 이상만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학령인구감소 문제 관련

- 교육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통계청 자료에 기반했는데, 통계청 출생아 예측과 달리 실제 출생아는 더욱 적다는 것을 지적
-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맞추어 대책수립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교육부는 과다추계된 학생 수 데이터로 교원을 더 뽑는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
-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교원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 및 교육청은 2013~2017년까지 교원 수가 2만 1,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교원수급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저출산위원회 등이 오류를 수정한 인구추계를 토대로 최소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교원수급 계획 자료 제출 필요
- 학생 수,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자연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지
- 학교, 학급, 학생 수는 줄어가나, 교육부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5년간 교육부 국유재산이나 시·도교육청 재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통폐합 실적은 저조,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쓰이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구조조정이 필요
-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비율을 법률로 규정해놓은 결과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지,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져 세수입 전망이 밝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재정 운영이 바

람직한 것인지, 교육부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2020학년 대입 정원은 현재수준을 유지할 경우 50만명인데 현재 고2는 특성화고 학생을 포함하여도 52만명에 불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입환경의 변화를 눈앞에 두고도 교육부는 무사태평함을 지적

○ 학교 통폐합 관련

-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처분도 하지 않고 매년 재산을 늘려나가며 몸집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들에는 압박을 가하고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이 솔선수범하여 폐교는 정리하고 학교 통폐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
- 학교총량제가 폐지되었지만 교육청과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총량제를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공식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변화가 발표되어야 할 필요
- 경제논리에 매몰돼서 지역 간 또 학부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학교총량제를 폐지하고, 보다 정교하고 다각적인 기준으로 학교의 신설과 통폐합 문제를 접근할 필요

○ 사교육비 관련

- 교육부는 통계청과 2007년부터 11년째 사교육비 조사를 하고 있고, 매년 약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고 분석되어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인 사교육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등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부터 대략 약간 하락하는 추세이고, 참여학생들의 사교육비 평균은 계속 상승해와 평균 사교육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 2017년은 2016년에 비하여 참여율과 참여자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여 전체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년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수능제도 개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교육과정이나 수능제도의 변화는 사교육의 성행을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

-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커지고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학력차이도 커지고 있는 등 교육 형평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

- 교육부는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런 장기대응 말고도 단기 대책 또한 마련할 필요

○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학여행을 떠난 학교가 전국에서 97개교였는데, 비용 관계로 같은 학교 내에서 수학여행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해외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편법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함을 지적

○ 2017년도 기준 사립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이 28곳이 있는데, 헌법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고액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함을 지적

○ 기초학력 관련

- 국제 또는 국내에서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수준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 과학 발전, 사회 발전에 있어서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나, 국가별 학업성취도평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수학 성적을 살펴보면 하위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

- 장관 취임사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기초학력 향상예산이 약 918억 1,000만원, 2018년도 지원예산은 약 200억 원인데, 시·도별 학업성취도 실태를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 미국의 경우 주별로 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주마다 거의 다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면서도, 그 기초학력 관련 자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지도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별 학습부진학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 초등돌봄교실 관련

-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교실 확대정책을 위해서는 초등돌봄전담사를 약 5,000명 신규채용 해야 하는데, 초단시간, 단시간 등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담사들이 시간제, 초단시간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전일제 돌봄전담사에 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업무시간이 끝나면 돌보던 아이들을 다른 전담사에게 인계하고 퇴근하여야 하는 등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힘들고, 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임을 지적
- 기존 전담사들의 적정노동시간 개선 기준·권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채용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선 계획이 있는지
- 초등돌봄전담사 약 1만 2천여 명 중 82%가 초단시간, 단시간 근무자이고, 특히 4시간 이상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고,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인건비를 시·도교육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만큼 학교와 지역 뿐 아니라 아이들과 전담사들도 상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초
등돌봄교실의 수용률은 저하, 대기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 편성된 수요산정액보다 적게 교부금
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
-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가 강사에게 지급해야할 교재교구비를 늦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채로 폐업하여 강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
생한다는 지적
-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 및 고교교육 혁신안 관련
 - 교육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2018.8.18. ‘2022
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
고, 수능위주전형 비율 30%이상 확대권고, 고교학점제 2022년 부분
도입, 2025년 본격 시행, 2019년 입학할 고1 학생들부터 일부과목
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도입, 2025년 전 과목 확대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음
 - 지난 8월 17일 1년의 시간을 소모한 끝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
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대하여, 장
고 끝에 난 결론이 이도저도 아닌 누더기라는 비판이 많다는 지적
 -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무산되었고,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성
취평가제) 전면 시행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지는 등 사실
상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교육정책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교육현장에
또 다른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문제풀이 식 수업을 지양하고,
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
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선 특수목적고의 단계적 전환,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동반되어야 하고, 지금과
같이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결국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주

로 선택하게 되어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목적이 왜곡되기에 정책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고교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입장과 향후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 지난 9월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체적으로 대입제도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입교육 영역마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인지, 교육청의 대입개편안 수립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교육청이 고등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
- 대입전형 간 적정 비율,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가 방법을 포함해 2025학년도 대입제도(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대입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중 어디서 담당하는 것인지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 2011년에 학생부 조작과 관련하여 “학생부 건드리면 파면하겠다. 학생부 수정하지 못하도록 나이스(NEIS)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 등의 보도가 있었는데, 2018년이 된 지금도 전혀 변한 것이 없음을 지적
- 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격증 등 비교과 요소들은 준비 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등 비교과 항목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
- 2018년 8월 교육부에서는 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필요
- 작년 학생부 기록을 수정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 고교별 평균값으로 보면 17배 차이까지 나는데, 이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나이스(NEIS)는 고친 로그인 기록만 남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소한 실수에 대한 정정 뿐만 아니라 특기능력, 성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

- 생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
- 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정 등으로 부정입학한 경우가 적발되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수능 최저학력 폐지, 학종 축소하자는 청원에 11만 명이 동의했는데, 여기에서도 ‘정성평가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교내활동 내용과 양 차이가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음을 지적
 - 교수논문에 미성년공저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학종 또는 각종 수상 경력에 포함되어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
 - 교과전형, 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의 증가에 따라 입시컨설팅 학원이 2014년 51개에서 2018년 248개로 약 5배 증가
 - 복잡한 입시제도와 불투명한 학생부종합전형이 고액 컨설팅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소외된 학생과 학부모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
 - 학생부종합전형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임사정관은 3년간 5%만 증가하여 동기간 19% 증가한 위촉사정관에 비해 학생부 심사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
 -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부모의 재력과 가정환경으로 학력이 대물림된다는 지적
 - 2011년 교육부가 대교협과 ‘입학사정관계 지원사업 위탁협약’을 맺어 대교협이 회피제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8월에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2015년 8개 학교, 2016년 2개 학교만이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지적
 -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특수관계인이 회피제척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되어 현행 대학자체 회피제척시스템으로는 대입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감사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법령 개선을 추진하지 않고

대학자체 회피제척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현재 배포된 ‘학생부종합전형 회피제척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교협이 적극 관리·감독할 필요

-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교협의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
- 자기소개서 표절로 올해 대학에서 탈락한 학생이 1,406명으로 표절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나아가 대필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학교안전 관련
 - 거제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넘어지는 농구대에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음을 지적
 - 유치원,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이 626만 명,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1만 6,800건, 학생 1만 명당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180.4건임을 지적
 -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가는데 학내 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여타 학교보다도 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람과 충돌, 물리적 힘 노출, 낙상, 기타 등 4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물리적 힘 노출’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보임. 이에 대한 설명
 - 학교교사 또는 부속건물의 16.7%가 40년 이상 되었는데, 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할 필요
 -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교육부는 40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이 34.4%로 특히 초등학교가 전체학교 중 39.7%가 30년 이상 된 건물로 노후화율이 굉장히 심각
 - 1000m²이상의 3층 이상 건물에 대하여 학교가 내진설계를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시설에 내진설계를 한 건 2009년부터로, 약 12년 정도 된 학교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음. 건축물의 건축연도나 내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만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50년이 넘는 초등학교 건물도 있는 등 위험한 건물들이 있음을 지적
- 현재 학교 석면제거율은 23.6%으로 낮고, 지역별 제거 편차가 심하며,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 잔해물이 발견되는 문제 등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석면제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
- 석면제거공사 과정에서 규정,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아 석면가루, 먼지가 새나올 우려가 있고, 석면제거모니터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에 있어서, 교육부는 홍보, 캠페인 위주고 지정 관리는 지자체, 단속은 경찰청이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받아 지정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사이 학교주변은 불법주차, 과속으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인천 연수구나 광주광역시 사례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우수사례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좋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관심 없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대다수라는 것임을 지적
- 교육당국의 무관심속에 통학로 안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캠페인을 더 열심히 하고 지자체에 협조공문만 보내겠다는 답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지
- 통학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다른 사회관계장관들과 협의하여 통학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여 통학로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을 다할 필요
- 올해 9월 말까지 12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학기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상반기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개학을 앞둔 8월 17일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열고 ‘개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대책 회의가 무색하게 9월 초 케이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지적
- 교육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사를 마친 식중독 사고 26건 중 17건은 원인이 된 식품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무상급식’이 ‘무상 식중독’으로 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
- 학교인접 공사가 시작되기 전 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알려줘서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석면 슬레이트와 비산먼지 대책을 협의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다세대 연립주택 개발공사는 법률상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공영감리를 받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
- 반경 200m 근처에 산업단지나 화학물질 사업장들이 있는 학교가 153개 정도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들 학교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다든가,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관리가 되어있는지
- 근처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학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
- 2016년 9월 경주지진 등 지진이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초·중·고 체육관(강당) 조명이 추락하여 발생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전국 학교 체육관(강당)의 자동승하강형 조명장치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필요
-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자동승하강형 조명장치의 조명과 승강장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교육부는 천장과 승강장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보강을 지시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자동승하강형 조명장치 안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 이후 교육부는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규정되어있을 뿐, 어떤 영역을 체험교육으로 진행해야할지, 체험현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
- 전문성있는 체험교육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안전체험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 같은 관계기관이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
- 지하공사를 하지 않고, 교실천장이 낮은 등 학교건축이 획일적이고 면적당 예산이 매우 낮게 책정되었다는 지적
- 전국 초·중학교 양변기 설치율이 75%에 불과하고, 지역에 따라 양변기 보급률이 최고 99.8%에서 최저 47.1%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격차를 개선할 필요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8.4%에 불과하며, 특히 화재발생시 대응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 초등학교 설치율이 더 낮다는 지적
- 관련법 제정 전에 건축된 학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설치해야할 필요
-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 환경부의 실외 공기질 기준(PM10 80이상, PM2.5 36이상) 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기준(PM10 100이상, PM2.5 70이상)보다 엄격한데, 교육부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한 교실이 하나도 없지만, 환경부 기준으로는 1,266곳이나 된다는 지적
 -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29%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되었는데,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은 기계환기설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기계환기설비가 33%, 일반 공기청정기가 61%를 차지하는 등 공기청정기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지적
 - 공기청정기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을 하는 문제, 공기청정

- 기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기계환기설비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등 기계환기설비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공기청정기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는 환기청정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2017년 추경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시범사업에 9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범사업이 끝나기 전에 시·도교육청이 가능한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다보니, 서울, 인천 등에는 기계식 환기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는 등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가 미비하다는 지적
 - 경기·울산·충남교육청만 환기와 공기청정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를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은 공기청정기를 렌탈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
 - 교육부는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을 뿐, 실제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
 - 3년 안에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끝내겠다는 조급한 대책으로 인해 천장 또는 벽체 공사를 수반해야하는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외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실내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
 - 초중고 BTL시설 운영성과평가에 사업자측 위원이 과다 포함되고, 실사용자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으며, 기재부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 생활형 SOC 사업 관련
 - 동 사업은 학교시설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동시에 확충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자체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로 인해 번거롭다는 지적
 - 생활 SOC 예산을 통하여 돌봄교실이나 학교내 체육관, 학교 내 도서관을 리모델링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노력 필요
 - 시설안전관리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

○ 스쿨미투 관련

- 최근 충북여중을 시작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스쿨미투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용화여고 스쿨미투가 발생했을 때 스쿨미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자체 조사가 아닌 학생들에 의한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현실감각이 없는 것 아닌지 우려
- 학업에 전념하여야 될 학생들이 교원들 또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지,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SOS에 응답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리고 있음을 지적
- 교육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일선학교들은 스쿨미투 폭로학생들을 색출하고 쉬쉬하며, 선생님들의 발언에 상처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사과할테니 축제준비나 하라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을 지적
- 교육부와 교육청은 스쿨미투 발생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하고 진상조사를 벌이며, 여론에 이끌려 대응하는 방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인데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 교육부가 개설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보면, 그 동안 교원이나 행정실 직원들,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대응방식들이 교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최근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생의 40.9%는 “교사들이 성희롱을 저지른다”고 했고, 27.7%는 “교사가 나를 성희롱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학교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심각한 문제, 교사들의 성범죄나 비위행위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
- 최근 스쿨미투가 폭로된 학교들의 대부분이 사립학교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음을 지적
- 최소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재단이나 교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당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학교재단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교원의 성범죄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장기무단결석, 학업중단 관련

- 장기무단결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7,909명, 2018년 7월 1일까지 12,043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과 2018년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학생이 13명이나 존재함을 지적
- 소재파악 되지 않는 학생들을 신속히 찾아내야 하고, 장기무단결석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대·가출 여부 등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장기무단결석 사유를 살펴보면, 초·중학생은 해외출국, 고등학생은 학교부적응이 다수를 차지, 이 같이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 필요
-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하루에 120명꼴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소관이 여가부로 되어있는데, 교육부 소관이나 최소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그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필요

○ 학교폭력 관련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감소하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7년 0.9%에서 2018년 1.3%로 증가하고, 목격응답률도 2.6%에서 3.4%로 증가. 보다 현실적인 청소년 비행 예방책과 사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교육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처벌’ 위

주의 강력한 형태로 개정되었고,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학폭위에서 처리하고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있어,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학폭위가 열리거나 학폭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폭력행위가 은폐되는 등 갈등이 심각한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실제 피해사실 없거나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지속·반복하는 등 학폭위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 기각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 2018년 2월까지 학교장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학교장 종결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다양한 부작용들이 예상되는데, 예상 부작용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고 생각하나, 지원기관의 개수만 봐도 지원이 굉장히 부족해 보임을 지적
- 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에 있어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부의 관련 규정의 미비함으로 이하에 피해 초기 단계에 상담, 보호조치 등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 2017년 가해학생 특별교육 미이수율이 2.86%, 가해학생 학부모 미이수율이 4.58%로 높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 특별교육의 내용도 부실해 보이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
- 학생간 성폭력 건수가 2013년 대비 2017년 312%나 증가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른 실정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학생간 성폭력 관련하여 가해학생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 최근 동아일보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전학 갈 학교를 찾지 못 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는 등 성폭력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나 다수 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 미비로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성폭력 피해자의 전학을 거부한 학교를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 학교폭력 업무 처리로 인하여 다른 업무가 마비되었다는 청와대 청원이 있는데, 동 청원의 인원은 3만 3,000명이지만, 이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지식인상담 실태를 확인해보면, 교육부의 지식파트너보다 전문변호사, 전문진로상담사의 답변이 더 많고 지식파트너의 답변채택률이 50%에 그친다는 지적
- 교육부 지식파트너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모의상담 테스트를 통해 선발한다고 하나,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도 있고 상담교사 경력이 몇 년인지 파악할 수 없어, 전문성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은 39.2%로, 중·고교 설치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초등학교 Wee클래스 중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절반에 달한다는 지적
- 자살위험진단은 1개월~6개월간 심리행동을 기반으로 평가해야하는데,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3년 주기여서 학생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의학적 진단이 아니어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지적
- 인터넷, SNS 등에서 유통되는 자살, 자해 관련 유해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SNS 괴롭힘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
- 미성년자 자살현황 통계가 교육부, 통계청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
- 학생정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한데, 배치율은 21%에 불과하다는 지적
- 전문상담교사는 확보하지 않고 Wee클래스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에 상담센터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
- Wee클래스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상담대상을 학습부진아로 규정하는데, 교육부 훈령은 학교부적응 학생으로 사업대상을 임의확장하여 전문상담교사 업무와 중첩되고,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
- 교육서비스를 학교나 학급단위로 운영하기보다 학생 수에 맞춰 질 중심의 교육지표를 개발할 필요
- 초등교원의 연수 이수 비율은 가장 높은 교육청이 49%, 전북은 16%에 불과 하는 등 코딩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므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교육부는 AR이나 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해서는 무선 인프라 구축, 스마트패드 보급이 필요
- 최근 5년간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이 약 2,000억 원인데 스마트패드와 무선인프라 구축 보급률은 3.8%에 불과함을 지적
- 교과용도서 공급업무는 현재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와 (주)미래엔에서 위탁관리하는 국정5개사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역별 다중으로 공급인이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및 소량다종 교과서 공급에 따른 수익악화가 우려되므로 공급체계를 개선할 필요
- 일본은 2018년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영토로 명기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독도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

- 독도 역사왜곡에 대해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독도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필요
- 역사교과서에 여성 독립운동가 인원 대비 언급수가 적어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할 필요
- 일선 교육청에서 부적절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인터넷 통일학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의 통일교육 지침서가 탑재되어 있는 등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을 추구하던 과거 정부의 기조가 남아있어 변화된 남북관계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교육부의 직무태만이라는 지적
-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경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고, 다른 부처들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남북 공동 번역사업’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교육 분야 남북 교류·협력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 교육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
- 진로체험기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학생 중 진로체험기관을 이용한 학생이 3.8%밖에 되지 않아 기관 수를 늘리는 것 보다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
-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면허가산수당을 신설하였고, 이는 정액이 아닌 정률(5%)로 지급하려는 취지였으나, 교육부는 매년 정액을 편성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영양교사는 조리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조리사 및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는 위험관리수당을 받고 있는 반면, 영양교사는 제외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초·중·고교 학생의 비만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패스트푸드 섭취

을 역시 증가 추세이므로 학교급식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르칠 필요

-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원이 부족하여 정원의 50%가 비정규직인 영양사라는 지적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양교사 부문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방학동안 급식실이 방치되어 식중독, 시설파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시설공사가 이뤄지더라도 안전, 시설사항을 책임지고 점검할 담당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급식조리사가 방학 중에도 근무가 필요하다는 지적
-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법정인력 배치가 필요한데, 교육부는 1년 6개월이나 범위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동안 취한 조치 내역은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교육청 대응이 제각각이고, 교육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데, 산업안전보건위 구성과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법을 준수해나갈 것인지
- 복지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수유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와 교육기관이 가장 부진했다는 지적
- 보건교사 배치율이 65%에 그치고,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률, 학업부담에 따른 정신건강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학생건강관리가 필요하며, 권역별 학생건강관리 만족도 격차가 커서 국가차원의 학생건강관리 모니터

링과 관련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전반적인 학교건강관리가 필요

- 전국적으로 1,290여 개의 대안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자들과 무관심으로 다수 교사들의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대안교실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PC방, 당구장 등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한 곳에 가두어 놓는 보육수준으로 운영되는 등 지금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교육은 교육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보육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제화 못지않게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양화를 추구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
-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개정 전에는 외국어고등학교의 목적이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라고 규정되어 있던 반면, 개정 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목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홍콩한국국제학교가 한국과정과 국제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고지원금은 한국학생에게만 지원되도록 회계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홍콩한국국제학교는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조속히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홍콩한인회 외에 학부모, 공관지명자 등을 포함하여 개방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공관장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
- 기존 다문화 교육정책은 외국인 학생 수가 상당한 경우 효과적이지 못하고, 지역상생 발전형 글로벌 인재육성 유형 신설 등은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

- 각 시도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센터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도입국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
- 법무부, 여가부 등 부처마다 중도입국자 기준이 상이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3만명 중 7천여명에 불과하다는 지적
-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관련
 - 최근 4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채용 투명성확보를 위해 교육청 위탁채용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지적
 - 2018년 8월 감사원의 ‘사립학교 교사채용제도의 적정성’ 분석결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나,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위탁채용하는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아 위탁채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18년 7월 감사원의 ‘공립교원 임용시험 관리실태’ 감사 결과 교원임용 1차시험의 위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안정적인 평가원 위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
- 현직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 임용 1차시험 폐지 등 교원의 양성-임용-연수-평가-보상에 이르기까지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
-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중 내부위원과 외부 위원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공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 공모제 시행에 대한 평가(장점, 단점, 부족한 점)와 보완책을 보고 필요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은 통상 만점을 받게 되고, 가산점 평정항목도 대부분 만점이어서 1정 자격연수성적이 가장 변별력 있는 항목이 되는데, 4년차 자격연수 점수에 따라 20년 후 승진이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이 지나쳐 이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

다는 인식조사가 있으나, 현황 파악 및 관련대책이 없다는 지적

- 13만 명이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라는 청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답변이 필요
- 교육청과 MOU를 통해 소아암 환자 등을 위한 병원학교는 MOU상 위탁취소를 뚜렷하게 막을 근거 조항이 없는데, 일부 병원학교가 폐교 위기이므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체대 입시학원은 체육시설도 학원도 아닌 법적 사각지대여서 향후 학원법상 학원으로 포함할 필요
-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였는데, 교육부가 수립한 분야별 계획상으로는 기관, 예산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 프로그램, 교원, 대중화라는 4개의 카테고리로 재정리할 필요
- 과학중점학교가 교육부사업에서 시·도교육청 소관사업으로 이관되는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대응투자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되어 지방재정부담이 우려
- 부산의 해운대를 중심으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교육격차가 심한 상황으로, 부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부산과학교육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산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에는 지역별 수학문화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현재 개관된 경남, 건설예정인 노원구까지 포함해도 2곳에 불과하므로 부산지역 등 수학문화관 추가 건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은 수학이 핵심이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에 수학과관의 설치근거가 있고, 부산도 부산시교육청 자체예산 400억 이상을 투입하여 수학문화관을 설립하려고 있는데, 부산의 수학문화관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장유학원 관련

- 2017년 행정재판에서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는 2016년 제122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한 장유학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조정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보고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재편집한 문서를 제출하였고, 부분적으로 누락시킨 부분은 모두 출연자 측(초대이사장 측)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했던 부분으로,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시키고 재편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현재는 해당 부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출연자 측 이사가, 교육부가 사분위에 보고한 보고서 공문을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이에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는 원본 보고서가 아닌, 재판부에 제출한(일부 누락 및 재편집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부분 공개인 경우 정보공개 규정에 의하여 원본을 손대지 않고 일부를 은닉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공개하는 사유를 알림. 공개한다면서 일부를 누락하고 재편집한 공문을 원본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허위공문서가 아닌지
-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가 사분위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쟁원인으로 김○두 이사장 동상 건립 관련 설립자 분쟁 발생’했고, ‘그 이후 교장 임용안 관련 초대이사장 측에서는 공모제로 하자고 하였으나, 초대교장 측에서 반대하면서 갈등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출연자 측에 의하면 설립자 동상 건립 관련 분쟁은 없었으며, 교장공모제는 과반수 이사 찬성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원과가 사분위에 보고한 근거는 무엇이고, 동 부분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가 사분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장유중학교 초대교장이 동덕여학단 조○식 이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초대교장이 그와 같은 역할이라면, 초대교장이 장유중 전신인 장유고등공민학교를 설립했고, 재산 출연을 입증하는 자료, 초대교장이 장유학원 설립자라는 주장이 개방이사 선임 전에도 있었다는 입증 자료의 제출 필요

- 장유학원 분쟁과 관련하여 양 쪽의 주장이 다르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하고, 장유학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사분위는 일반적인 재단의 개방이사가 공익이사인 것과 달리 장유학원 개방이사는 일반이사 성격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고등교육 관련>

- 전국 국·공립대학은 학기기준, 위촉기간 등 실제 강의경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기재하는 반면, 사립대학의 교원 경력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
- 사립대 교원의 경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관련
 -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2016년 외국인유학생 중 불법체류자가 5,652명이었던데 비해 2018년 8월 기준 11,176명으로 늘어나 오히려 불법체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
 - 일부 유학생은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구타·감금당하고 불법취업을 알선받았다는 지적
 - 언어능력 부족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TOEFL기준상 실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은 40.4%에 불과하다는 지적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강좌 및 지원이 부족하여 질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
 -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보장할 필요
 -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수출하기에 앞서 고등교육 질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대교협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UNESCO/OECD 가이드라인 이행, 국내대학의 해외홍보, 개별대학의 질적수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를 국내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립학교 자율권 훼손 관련
 -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시 전·현직이사협의체에 비리경력 있는 종전이사가 포함되면 정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청취비율을 과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2018. 6. 26.)
 - 종전이사 중 1명이라도 법률위반이 있으면 종전이사로부터 청취하는 정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청취 비율을 과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
 - 종전이사의 대학운영권 제한 및 실질적인 박탈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
 - 최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분위 심의원칙이 재정비되었는데, 비리사학이 아닌 분규사학은 종전 이사의 이사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함에도, 해당구성원 전원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사후보자 수를 정하여 각각 추천하도록 하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할 필요

○ 폐교 관련

- 학령인구 감소, 대학 경영난 가중 등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폐교대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자발적 폐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유도·지원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부 차

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정책적 배려 필요

- 폐교 후 재산활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폐교대학 관계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 한국은 2000년 이후 16개교가 폐교되었으나, 우리나라와 사립대학 비중이 비슷한 일본은 3개교 폐교에 그쳐,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등교육 구조변화에 대해 교육부가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대학이 스스로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부는 경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 및 재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일본·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
- 학령인구감소로 사립대학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교직원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운영이 악화되기 전에 폐교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
- 특별편입학 대상자 중 32%가 편입하지 못하는 등 폐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피해가 우려되며, 2018년 서남대 학생은 폐교여부가 공지되지 않아 특별편입학을 늦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
- 편입할 학교 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특별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학내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

○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 기본역량진단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개선대학보다도 많은 재정지원을 받았던 대학들이 역량강화대학이하로 지정된 것은 아닌지
- 평가항목 설계에 있어 정량지표는 대다수 대학이 90점이상 획득하도록 설계되어 사실상 정성지표에 의해 평가결과가 결정되어 기본역량진단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이 떨어지고, 결과를 결정하는 1단계 평가에서는 현장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신뢰성 떨어지는 기본역량진단평가로 인해 우수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온 대학들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학내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
- 기본역량진단 평가위원의 대부분이 사립대학 교원이어서 교육목적에 관한 가치관 및 평가기준의 편향성이 우려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중 특정집단에 불리한 평가가 아니었는지 통계분석이 필요
- 대학비리를 폭로하거나 내부고발한 경우도 비리가 적발된 경우와 동일하게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탈락시키면, 오히려 부정비리를 묵인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수도권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률을 비교해보면, 각각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높는데, 이는 교육의 양극화, 지방 교육의 공동화, 지역경제의 붕괴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당시 지방대와 전문대의 감축이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 2주기, 3주기 등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희생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정원감축 대상대학 41개 중 36개 대학이 지방대학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방침과 부합하지 않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 2주기 평가시 5대 권역 구분상 경인지역 대학은 서울지역 대학과 함께 같은 권역으로 평가되어 상대적 피해가 우려되고, 경인지역 학생이 서울로 전출함에 따른 세제구조상 문제를 감안하여 수도권을 서울-경인지역으로 재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방거점 국립대로 대학을 통합한 경우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은 평균 2.6% 증가하여 2018년에는 19

조 6,681억원에 이른 반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인문사회분야 순수 R&D예산은 2014년 2,463억원에서 2018년 2,444억원으로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되었음을 지적

- 인문사회분야 R&D 예산이 감소된 반면 2014년 이공분야 R&D예산이 3,313억원에서 4,525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하였는데, 이공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예산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 균형잡힌 학문 발전이 저해되고 인문사회 학계의 소외감이 증가될 것이라 우려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순수기초 학문분야 R&D예산을 2배 증액하여 도전적 연구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R&D예산의 증액 및 과감한 투자가 필요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필요 예산과 중장기 로드맵 제출 필요
-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계획 및 실제 집행 내역, 현 정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계획 및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의 한계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 4년제 대학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대학재정 지원 편중 완화 노력 및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확대 필요
- 서울대 1명이 전체 대학생 6명, 국·공립대생 3.7명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편중이 심각하고, 대학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 2013~2017년, 5년간 지방 거점 국립대 9곳과 수도권 주요 사립대 9곳의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비교한 결과, 주요 사립대의 예산지원액이 약 200억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립대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축으로, 국립대 육성 정책을 펼칠 필요
-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서열화문제 해결 필요

○ 부실학회 관련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공동조사로 최근 5년간 83개 대학의 1,057명의 연구자가 와셋과 오믹스 두 부실학회에 1,289회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중 2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의 수는 152명, 3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는 40명이나 된다는 것을 지적
- 와셋은 언론을 통해 부실학회 임이 알려졌고, 오믹스는 미국법원에서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예비금지판결이 나기 전까지 교육부는 5년 이상 이들 두 단체가 부실학회임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
- 최근 모 언론에서 온라인 논문출판 사이트인 월드리서치라이브러리(WRL)를 통하여 가짜 학술대회를 출판하는 학회들을 추적하여 최소 23개의 부실학회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교육부는 ‘부실학회 예방 권고사항’을 발표하여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게 부실학회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나 참석 연구자에 대한 징계를 모두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대응은 부실학회를 모두 가려내기에는 실효적이지 않을 것임을 지적
- 부실학회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이 앞장서서 부실학회에 대한 정보와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외국대학 및 외국 연구기관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부실학회의 조속한 적발에 노력할 필요
-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는 34개 대학에서 81개 사업단이 와셋이나 오믹스같은 가짜 학회에 참여하였는데, 개인의 연구윤리 문제도 있지만 BK21 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나 실적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입찰비리를 저지른 부정당업체에 대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

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서울대 김○수 교수 특허 빼돌리기 의혹이 있었는데,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 2,389건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취득한 특허가 1066건(45%)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의 특허 빼돌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임을 지적
- 작년 1,597개 연구과제가 정부출연금 연구비를 받았고, 이 중 음식점으로 검색하여 산출된 건수가 20,489건, 약 18억 9,000만원이고, 어떤 과제는 전체 연구비의 16.9%가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등 연구비를 지원받아 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개인식사비를 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각 대학별 출연연구원별 적발 리스트를 받아 본 결과, 전체 적발 건수는 122건인데 이는 표절 등에 집중되어 있어 특허 빼돌리기, 연구비 부정사용, 가짜 학회 참석 등의 건은 한 건도 없음을 지적
- 과기부와 교육부가 연구 부정을 막겠다며 합동으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셀프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
- 특허 빼돌리기,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문제를 적발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제도개선 필요
-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입시에서의 회피·제척 시스템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중소 국립대학의 학사관리 및 채용비리 등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비유학생 및 정부초청 장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회기여도평가, 인재활용전략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
- 모집전형별 국비유학 지원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특별전형과 기술기능인전형은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

로 활성화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지원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 2011년 대학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과 강사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는 등 현장의 이견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시행이 유예되어 왔음을 지적
- 시간강사법이 2019년 1월 1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와 대학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안을 기반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대학에만 모든 재정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지원 논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동 법안과 방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시간강사법의 시행 유예 기간이 세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기국회 내에 합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고, 교육부는 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와 대학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사립대 총장선임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의 65.7%가 총장임명제여서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봉쇄되었다는 지적
- 우리나라 대학법인은 광범위한 조세상 혜택,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총장을 이사회만의 결정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전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당시 임용이 거부됐던 분들이 현 정부 들어서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임명을 거절한 것인지 진상을 확인할 필요
- 목포대, 광주교대, 공주대 총장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각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학내혼란이 계속되어 학교구성원의 피

해가 우려됨

- 공주대는 2014년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총장 공백이 시작되어, 당시 후보 1순위자인 김○규 교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도 거부처분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승소판결
-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적격심사를 재 실시해 김○규 교수가 1순위로 심사를 통과했으나, 2018년 10월 다시 부적격판단을 내리고 임용제청을 거부
- 광주교대는 2018년 9월 세번째 총장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이 내려져 2년 넘는 기간 동안 총장 공석 상태 지속
-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교협의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
-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또는 미성년 공저자가 있는 논문에 대한 미제출 학교들에 대한 조치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전형료 지출항목 중 회의비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수시모집 학종 확대를 유도하면서 전임사정관이 아닌 위촉 사정관이 확대되는 현실은 학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지적
- 예체능 계열 대학등록금이 명확한 산정근거없이 최대 300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대학부터 차등등록금 산정근거를 조사할 필요
-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능여부와 거래카드사의 수를 조사할 필요
-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일부 대학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교육부가 시정요구할 필요
- 총 7조 9,498억원에 이르는 4년제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이 학생 복지, 교육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 2017년 결산 기준 법인부담금을 학교 및 학생에게 전가하는 학교가 150곳 중 110곳에 이르며, 교육부 사립대학 지침에 따르면 교비회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지출은 비 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침 위반 시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등록금 수입으로 법인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는지, 누적적립금의 특정목적적립금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낸다고 신청하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교육부가 이를 전부 승인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부령에 추가하여, 관련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사립대학이 교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다보니 수익형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 전문대교협과 협의하여 수업 연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내진성능평가지 불법적인 하도급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내진성능평가 추진 속도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대학 간호학과에서 비위관삽입, 관장실습 등 위험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실습모형이 있는데도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을 침해한다는 지적
- 대학 간호학과 실습의 안전교육이 학기마다 4~6시간이기는 하지만, 의료·간호학생 실습에 맞는 내용은 1시간에 불과하다는 지적
-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들의 성범죄 및 갑질을 철저히 조사한 후 가해자를 징계할 필요가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부산대치과병원의 갑질 및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준이 미흡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방지 대책이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위원

도 8명 중 7명이 회사측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산대치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 폭력, 태움, 성희롱 등에 대해서 교육부가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필요

-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학동물병원이 부족하므로 해당 지역의 대학동물병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
- 경남지역에 로스쿨·한의대·치대가 없으므로 교육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
- 언어교육원의 수업료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므로 시정할 필요
- 안전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수율을 점검하고 시정할 필요
- 국립대병원 감사 임명 관련
 - 감사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정치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뽑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 각 병원에서 무순위로 추천하는 것이 규정인데 순위를 표기한 병원이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
- 지역거점대학들에 대한 학교역량평가는 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무엇인지
- 전문대교협과 협의하여 수업 연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 부실집행에 대한 회수 관련 소송과정에서 내부결재 및 교육부 보고 없이 청구가액을 10억 7,000만원에서 6억 1,500만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할 필요
-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 업무 중복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수원대 관련
 - 수원대에 과거 이 모 총장과 그의 배우자 최 전 이사장 등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여 법

인과 대학 전반에 비리를 저질렀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수원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과거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코앞에 두고서도 눈을 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
- 수원대는 2012년 7월 제10차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 적 있었고, 2014년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사장 및 이사에겐 간단한 경고만을 명령함에 그쳤음을 지적
- 2017년 10월 교육부는 다시 수원대에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실태조사 결과 110억 상당의 회계 부정사건이 발견된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고, 교비회계의 부당집행을 근거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2014년도 종합감사에서 내렸던 처분과 굉장히 차이가 나, 2014년도에 교육부가 감사의 책임을 충분히 하지 못했음을 지적
- 대학기본역량진단 2차 평가에서 수원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되었고, 이에 따라 수원대는 3년간 정원의 10%를 감축해야 하고, 미이행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학생, 교수가 비리사건에 따른 손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
- 2014년 교육부가 공정하고 엄밀하게 수원대에 대한 감사를 했다면, 수원대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2017년 실태조사에서는 다행히 적합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 중원대학교가 교수 비위를 문제제기한 학생에 대해 제적처분을 하고, 제적처분 무효판결이 나자 다시 30일 유기정학을 하여 이중징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
- 사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와 달리 사립대학교와 관련된 감사보고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시되지 않고 있고, 수원대의 최근 실태조사

와 2014년도 종합감사 상 차이가 났는데, 감사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쇄신을 고려할 필요

- 교육부 조사로 중앙대학교가 두산건설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성균관대 또한 비슷한 의혹이 있으나 삼성과의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지난 2018.5.2. 교육부는 평택대에 처분결과를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평택대 이사회는 정족수 11인 중 재적 이사는 2인에 불과하여 그 기능이 마비, 총장도 부재하여 학사행정 파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0일 이후 평택대 교수회는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데, 평택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파견할 계획인지
- 영남이공대에서 ‘독립책임경영제’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학과 별로 학생 수, 수입지출 등의 재정수지를 평가해서 교원의 상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결국 대학교수를 영업사원화시키는 제도이며, 교육현장에서 일반사업체에서 하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이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
-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13년간 77개 대학(24.4%)을 감사하였는데, 전체 316개 사립대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면 53.5년이 걸리게 되는 등 전체 감사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막대할 것임을 지적
- 현재 사학감사담당관실 직원이 10여 명 정도인데, 이정도 인원으로 316개 사립대학을 효율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 교육부 직원들의 인력 재배치, 감사원 인력 또는 교육청 인력까지 파견을 받든가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 사학혁신위원들이 혁신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

본 자료들이 있어야 할 텐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조차도 교육부로부터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사학혁신위에 자료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동은 그 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임을 지적
- 교육부와 사학혁신위는 상호 협력 하에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해야할 존재로, 교육부는 혁신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할 필요
- 사학혁신위가 출범된 이후 진행된 회의 내용을 보면 1차부터 5차 회의까지 6개월 동안 혁신위 운영 계획 및 규정을 마련하고 수정하는데 소모하였고, 안전 자료로 대부분 강의자료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많아, 7차 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에 12명의 혁신위원 중 11명이 보이콧을 선언했음을 지적
- 사학혁신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학 발전 5대 중점 과제별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 운영 내실화 추진,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비리 엄단,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로 혁신안을 제시받아 보고, 그 후 감사라든가 비리 근절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

<평생 · 직업교육 관련>

- K-MOOC 관련하여 3년 동안 1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이수율은 9.2%에 불과, 이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가 2016년도에는 32,000개, 학생 수 6만 2,000명 가까이 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약 20,000개, 학생 수 4만 3,000명 되었고, 올해의 경우 10월 1일 기준으로 약 6,000개의 기업, 실제 현장실습에 나가 있는 학생 수도 상당히 적음을 지적

-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수나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안전을 강조하면서 참여 기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급여를 살펴보면, 2016년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의 구간이 약 70%정도 되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0%이상인데, 2018년도에는 100만 원 이하 구간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해볼 필요
-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문제와 참여 학생들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완책 만들 필요
- 현재 일반대학들은 교육부, 노동부, 과기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우수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지난 2011년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설하였으나, 불과 1년만인 2012년 중단되었고,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문대학생에 대한 국가우수장학금 복원을 교육부에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장학금 신설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국가 인재육성 정책의 균형적 개선, 국가정책의 직업교육 차별과 전문대학생 소외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성인 비문해자는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인데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개인학습을 하기 어렵고, 일률적인 교육방송으로는 효과성이 떨어져 방문형,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
- 청암대 관련
 - 청암대학은 비리사학으로 강○운 총장의 업무상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도,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암대 총장의 보복성 징계에 대해 모두 취

- 소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교수 3명 모두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지
- 총장의 성폭력 피해교수가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후임자를 전임교수로 임용하였는데, 제재방안이 없는지
 - 성폭력 피해 교수들을 음해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인데 당시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관련 교수에 대해 징계요구를 해야 할 것인지
 - 청암대학의 본부 보직자들이 학생들을 선동, 수업반대서명운동을 하여 이를 근거로 폐강조치한 사건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의 집단 수업거부를 금지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므로 관련자 해임요구를 할 것인지
 - 「사립학교법」 상 비위로 조사 중인 때는 의원면직이 제한되나, 청암대학은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받는 교수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회유하기 위해 의원면직 처리한 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청암대학 이사회는 총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국립국제교육원】

- 해외한국어 지원체계 브랜드 통합 관련
 - 2016년 7월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실행 방안’을 통하여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구분 없이 해외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 또한 세종학당으로 지정되었는데, 세종학당으로의 브랜드 통합은 동포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져 동포에 대한 정체성 교육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한 지역의 복수의 세종학당이 생겨나 혼란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속출됨을 지

적

-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는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라는 명칭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
 - 한국교육원 교재개발이 문체부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되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재 개발 사업이 문체부로 이관되었는데, 재외동포에게 한국어 교재는 단순한 언어교재가 아닌 민족정체성과 이주역사를 알려주는 교육자료가 되어야 하고, 통합으로 인한 효율화는 있을 수 있지만 72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음이 크게 우려
 -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문체부 소관으로 이관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와는 별도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연구·개발되어야 할 필요
 - 재외 한국어교원의 연수는 교육목적과 대상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도 달라져야 하지만, 세종학당 브랜드통합에 따라 교원연수도 일괄적으로 통합되어 연수 대상자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였음을 지적
 - 브랜드통합이후 세종학당재단이 한국어교원연수를 통합시행했는데, 특히 2017년 국내초청연수를 통합하자 연수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2018년도에 다시 부처별로 국내초청연수를 분리실시했다는 지적
 - 재외 한국어교원 국내공동연수 추진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각 부처 별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현재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연수가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 이외의 한국어교원 연수를 담당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의 세종학당으로의 브랜드통합을 포기하고 명칭변경, 교재개발, 교원연수 등의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
- 영어 뿐 아니라 소수외국어 어학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공포되었고 그와 관련된 준

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저변 확대와 전문 인재 양성계획 중 기초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 K-MOOC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을 위한 특수외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 저변을 확대하고 대학에 과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지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려고 법이 마련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 계획 중이다”,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등 법의 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마련될 필요

【국립특수교육원】

- 2018년 1학기의 경우 12개 시각장애 학교 50개, 일반학교 454명에게 395정의 점역 교과서를 배포해야 하는데, 학기 시작일보다 한 달 이상 소요된 것이 162정이고, 길면 두세 달도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 현재 출판사에서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원본파일은 인쇄용 파일로 점자교과서 제작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하여 2018년 6월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장애인용 교수·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지침’에 따라 출판사들이 교과서 원본파일 납본을 의무화한다면 점역과정이 단축되어 교과서 제작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위탁업체가 1곳으로, 1곳이 하기에 점역양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등 점역교과서 제작 관련하여 점검을 해볼 필요
- 교과서 점역 뿐 아니라 EBS교재 점역, 국·공립대 도서관 전공서적 점

역 등 전반적인 점역 체계에 대하여 점검해 볼 필요

- 2017년 개정·고시된 점자 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점역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 갈등 문제에서 우리 국민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지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현재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자격시험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응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됨을 지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출제위원의 공정성과 시험을 원활하게 치러내기 위한 인력·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제기된 문항이 의는 총 942건이고, 그 가운데 문항오류로 처리된 것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신뢰도 있는 시험이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학계의 정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오류를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
- 국사편찬위원회는 학계의 정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오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보도나 블로그 운영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나 대응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신뢰도가 생명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무분별한 흠집내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미국·유럽·러시아·일본·중국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자료가 많은데, 해외에 소재한 우리나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해외 소재 자료에 대한 점검 필요
- 국사편찬위원회 회의가 올해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고, 그 사유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회의를 못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왔음을 언급
- 법률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시행령에는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 반면, 국사편찬위원회 운영규칙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여 법에 맞게 규칙이나 규정을 정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 마련 필요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14명 중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이나 편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감경하고 있는데,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할 필요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자료 수집, 질적 분석 필요
- 교원 징계, 소청, 소송현황은 기초자료이나, 상시적으로 작성·관리하

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

- 비위 교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크게 경감받거나, 소청심사결정이 소송결과 패소한 경우가 증가하여 소청심사결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2. 시·도교육청

【공통사항】

- 전교조의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는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지만, 강원, 충북, 제주, 대구 경북교육청 5개 교육청만 성과급 균등분배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보고했다는 지적
- 소방차 진입 장애 학교가 21개교 있어 개선 필요(서울/충남/경북)
- 전국 초·중·고 중 852개교가 골프연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업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서울/인천/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
- 교복은 각급학교 자율사항이지만, 학생 건강과 편의를 위해 편안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될 필요(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
- 교육청 비정규직은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이 크게 낮아 이를 개선하고, 성 비위 공무원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필요(서울/인천/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
- 성 비위사건에 대해 가해-피해자간 유형별 현황, 국·공립, 사립학교별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광주/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
-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인천만 모든 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무료 생리대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경미한 사안임에도 학폭위를 소집하거나 학폭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공통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조치현황을 파악하고,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조사할 필요(서울/경기/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부산/광주/전남/전북/세종)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 법정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차차 개선할 필요
- 초·중학교 화장실 화변기를 양변기로 적극적으로 교체할 필요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
- 지역별 학생부 정정횟수 및 징계 수위의 편차로 인한 공정성에 대한 우려 해소 대책 필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감독권한이 교육청에 부여되어 있으나,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어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
- 사립유치원이 원아 수 허위보고 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적발되어도 시·도교육청이 보전조치만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국가기관 대상 1달에 2건 이상 도청이 적발되고, 1회성 도청탐지활동으로는 색출이 불가능하도록 탐지회피 기능을 갖춘 도청기들이 일반화된 상황으로, 부총리는 1회성 도청탐지활동의 한계 및 이에 대비한 130개 이상의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적시된 중요 장소들에 도청탐지설비를 구축·운용 중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1회성 도청탐지활동만 수행하고 있는지
- 도청탐지설비의 구축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앞으로의 보완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고 노조라는 이름을 안써야 하며 그 상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음. 또한 전임자 휴직은 불법이나, 이를 허용하는 교육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 상도유치원 붕괴이후 서울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인접 공사장 합동 점검 결과에 지하구조공사가 제외되어 이를 포함할 필요
 -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각급 유치원 및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간에 유기적인 보고 체계 필요
 -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업체, 유치원,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와 원인규명 필요
 -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 필요
 - 유치원과 학교 인근 공사의 경우 항상 공영감리가 이루어져 철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
 - 해당 건물로부터 유치원 어린이들을 격리하여 안전조치하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필요
 - 교육환경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 필요
- 교장공모제 관련
 - 교육자치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필요
 - 교장공모제는 절차상 형평성, 투명성, 객관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대전제임. 현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의혹 사건 관련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의혹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 필요
-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침준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
- 고등학교 교원 및 교원 자녀의 동일학교 근무·재학의 경우 사립학교의 상피제 적용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나 지도 감독하여 개선되도록 할 필요
- 서울로의 위장전입이 다른 지역 전체 위장전입보다 많고 자치구별 통계를 보면 학군이 좋다는 곳에서만 위장전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 위장전입의 원인에 배정 기준이나 학교 선택권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리베이트를 받은 비리영양사에 대한 징계처분 미이행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시 생년월일, 이름 등 불필요한 인적정보를 삭제하고 응시자가 공정한 면접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무상급식에 앞서 학교별 급식단가에 따른 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
- 초등학교 학생에게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스쿨미투와 관련하여, 성비위 교원에 대해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의 조치 경과를 전수 조사할 필요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성폭력이 조사되었음.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 필요
-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식을 개선하거나 지원액 증액의 노력 필요
- 생활형 SOC 사업을 통한 운동장 개선사업, 도서관 신축사업 등은 적

극적으로 추진하되, 학교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책임 문제는 법,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

- 폐타이어 충전재로 만든 학교운동장에 대한 정리 필요
- 공익법인 관련법과 내규·지침·편람과의 충돌 또는 위임된 내규나 편람이 법보다 완화된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해고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
- 개선된 학교시설물의 외부시험 장소 대여 제도가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부족한 교원치유센터에 대한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금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우열반 편성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가 강사에게 지급해야할 교재교구비를 늦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채로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신축 학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 주기를 단축시키고, 신축 학교만이라도 유해화학물질 측정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현재 대다수 학교가 설치하는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환기청정기, 기계 환기설비 설치를 우선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운영 필요
- 공조시스템 운영 등 학교 체육관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특수학교 교사의 폭력 신고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강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한번 더 조사할 필요
- 유치원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수행할 필요
- 학생 자살에 관한 철저한 대책 및 방안 마련 필요

-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기준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
-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성과평가 체계 마련 필요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 생리대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스쿨 미투 관련
 - 스쿨 미투 발생시 실질적인 시스템 작동 필요
 - 가해자 은폐 및 제보자 노출에 관한 대책 필요
- 공익제보 교사 신분보호 및 부당징계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수업시간에 못하게 되어 있는 Wee클래스 운영지침 개정 필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원에 1,000명이 안되더라도 질적으로 따져서 맞는 경우 답변 필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필요
-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방안 필요
- 학교 석면제거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과 관심 필요
- 도박예방 교육조례 제정 등 학생 도박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광고를 수주한 언론사가 6위인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고, 공공 앱 개발에 1억 3,000만원을 쓰고 4만 7,000명이 이용한 홍보는 개선할 필요
- 다문화 학생의 밀집 지역의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집중되어 한국학생이 유출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학교에까지 해당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개인정보 동의 표시 없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 필요
-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19년부터 학교밖청소년에게 사후확인절차 없이 인당 20만원씩 교

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데, 바우처가 아닌 현금지급이어서 유흥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여가부는 중복지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예산이며, 학업복귀유인을 줄여 대안학교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교육청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창의예술교육센터가 서북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2018년 제2센터를 동부권에 개관하였으나, 서남권은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권역별 창의예술센터를 설립할 필요
- 지자체장과 교육감간 정치성향 차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감 선거제도를 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지
- 민주시민교육 시행의 준비과정과 절차, 진행상황 보고 필요

【인천광역시교육청】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시 생년월일, 이름 등 불필요한 인적정보를 삭제하고 응시자가 공정한 면접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초등학교 학생에게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성폭력 피해자 책임 뉘앙스 가정통신문, 연예인 폭행사건 희화화 등 교육현장에서 부적절한 인식 노출이 이어짐. 교육청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할 필요
- 야구부 감독 금품 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운동부 촌지관행 개

선 필요

-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공익법인 관련법과 내규·지침·편람과의 충돌 또는 위임된 내규나 편람이 법보다 완화된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
- 교육감의 미투 사건이 발생한 현장 학교 방문 및 학생 신원에 대한 보안 유지 필요
- 유치원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수행 필요
- 학생 자살에 관한 철저한 대책 및 방안 마련 필요
-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성과평가 체계 마련 필요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 생리대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필요
- 도박예방 교육조례 제정 등 학생 도박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개인정보 동의 표시 없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 필요
-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식을 개선하거나 지원액 증액의 노력 필요
-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을 발표함. 무상교육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대하고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급식공급에 노력할 필요
- 서흥초 야구부 해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구도심지의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가 발생할 때, 학령인구 변동을 면밀히 살펴 구도심지의 학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문제를 검토할 필요

- 민주시민교육 시행의 준비과정과 절차, 진행상황 보고 필요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내 초단기간 비정규직 근로형태 현황 파악 및 처우여건 개선 방안 필요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시 생년월일, 이름 등 불필요한 인적정보를 삭제하고 응시자가 공정한 면접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초등학교 학생에게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거나 키순으로 부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 경기도 교육청의 1운동부 1감사관제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지
- 야간자율학습 폐지 관련
 - 야간자율학습과 저녁급식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계획 필요
 - 야간자율학습 대신 개설하는 ‘경기꿈의학교’ 과정이 수강인원 미달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더 많은 학생이 경기꿈의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최근 3년간 외부인의 학교 침입은 전국적으로 249건 발생함.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성폭력이 조사되었음.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 필요

-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식을 개선하거나 지원액 증액의 노력 필요
- 경기도의 2017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건수는 8,946건으로 2013년 대비 81% 증가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학생징계 사유 중 흡연으로 징계받은 학생의 비율이 높으므로, 건강 교육에 흡연 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등 청소년 흡연률을 낮출 필요
- 경기도의 최근 5년간 학생 자살률이 높음. 맞춤형 상담 확대 등 철저한 대책 및 방안 마련 필요
- 공익법인 관련법과 내규·지침·편람과의 충돌 또는 위임된 내규나 편람이 법보다 완화된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
- 경기도 외부 청렴도 문제와 관련하여, 교장, 교육감, 교육청 당국 간 끊임없는 소통 필요. 운동부 감독 등과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필요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해고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
- 학교 안전점검 인원을 더 충원하여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필요
- 교장공모제 운영 방안 개선 TF의 회의 또는 논의 내용 공개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치원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수행 필요
-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성과평가 체계 마련 필요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 생리대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필요
-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방안 필요

- 학교 석면제거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과 관심 필요
- 도박예방 교육조례 제정 등 학생 도박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학교 인조잔디 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부상 위험이 높으므로 점검할 필요
-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다양한 교육철학이나 운영방식을 가진 대안학교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하지 않는 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필요
-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은 교통·산업, 교육·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가 있어, 경기북부경찰청이 분리·신설된 것과 같이 교육청도 남북간 분리 필요
-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문제를 검토할 필요
- 민주시민교육 시행의 준비과정과 절차, 진행상황 보고 필요

【대전광역시교육청】

- 석면철거 완료 후 의심물질이 발견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감의 의지가 잘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
- 예지중고등학교 관련
 - －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평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
 - － 대전시와 협의하여 조치할 필요
- 2018. 10. 17. 대전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중 예지중고등학교 관련

- 교육청의 답변은 학사과행의 책임이 교육청에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답변인데 이에 대한 입장
- 수업거부를 통한 학사과행 관련 정추위 위원에게 다 들어줄테니 교육부 앞 집회를 멈추라고 한 이유
- 무자격교사 채용으로 인한 교육법 위반을 바로 잡지 않은 이유
- 학사과행 조건이 이루어지자마자 보조금 지급중단 결정의 이유와 기준없는 편향된 결정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입장
- 무리하여 대법원상고를 한 이유
- 성폭력 예방 교육용 자료, 학교폭력예방 자료 내용의 부적절성과 관련하여, 배포시 철저한 검증·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해 실태조사할 필요
- 아이들이 신학기에 들어서서 잘 학습이 되도록 선생님들의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할 필요
- 62개 학교 중 80% 가까운 학교가 8시 이전에 등교,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관심 필요
- 성비위 혐의교사의 직무정지 방식이 연가가 아니라 보직해임이나 대기발령으로 할 필요가 있음. 보직해임이나 대기발령 제도가 불비하다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이 영양교사 대비 영양사가 많은 것에 대해 제도 운용의 개선 필요
- 학생 10만 명당 민원 건수 중 급식 민원 건이 대전이 가장 높음.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대구광역시교육청】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인력충원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필요
- 미군부대와 학생, 교사 등 지역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 및 위탁채용 범위 확대 등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 확대 노력 필요
- 수영교육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정부, 시, 교육청이 힘을 합쳐 학생 전용 수영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시청, 구청 등과 함께 학교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차량 이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통행안전 방안을 수립할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 마련 필요
- 내년부터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빨리 확대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무상교복·고교무상교육에 관한 의견·계획
- 비리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견, 지원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담보 대책 마련 필요, 대구시 유치원의 비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필요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필요

- 대구 평화의 소녀상을 중학생이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구 사교육비가 서울에 이어 2위, 학원비 인상률도 전국 3위임. 교육청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원비 정책에 개입하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킬 필요
- 영남공고 관련
 - 교사 간 연애킴지, 학기 중 출산 았겠다는 각서, 이사장과 교장의 교권 침해 등 영남공고의 비위행위 의혹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필요
 - 특정과목 전교생의 시험 결과가 전산시스템에 삭제된 것에 관해 교육청에서 감독권을 발휘할 필요
 -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았었던 대구교육청·영남공고 특별감사 자료와 처분 결과, 학교의 조치 사항 이행 결과 등을 제출하고 영남공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 제시 필요
-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경신고가 전환 이후에 학교의 인가 학급수가 12학급에서 9학급으로 감소하였는데 학교와 학생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 진로상담 교사 선발 시 대구교육청만 교육청에서 활동한 경력에 배점을 주고 았는 것은 제도 개선할 필요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았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필요
- 교권 침해 관련
 -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이후에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이 무엇인지
 -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교권 담당변호사 채용을 확대하여 교원의 교권 침해 해결을 도와줄 필요
- 학교 미투 대응에 았어 제보학생의 비밀보호, 접촉금지 등이 지켜지

도록 할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강원도교육청】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은폐 논란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유치원, 유치원 놀이시설, 초등학교, 초등학교 놀이시설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어린이활동공간 5,102개 중 787개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이 시설들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필요
- 학생 자살과 관련한 강원도 교육청의 연구 및 사업진행 상황, 학생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최근 3년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지출은 총 140억으로 전국 1위이나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은 27.7%로 최하위임.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 최근 3년간 초중고 통폐합 학교가 늘어나면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통학버스 내 안전시스템의 예산 확보나 실행 실적을 관리할 필요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필요
- 다른 시도에 비해 라돈 기준치 이상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학교가 많은데 다른 예산보다 안전 예산을 더 배정하고, 교실을 위층에 배치, 측정기 설치, 환기 등을 실시할 필요
- 역사 보조교재 작성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으로 신뢰성 있게 작성할 필요
- 초등학교 교원 수급을 위해 지역 교대 총장들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지역인재 채용방법을 만들 필요
- 강원도는 학생 1만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높고 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부나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조사하여 보고 필요
- 교사 연수 프로그램 중 통일안보교육의 내용이 시대변화에 맞게 바뀔 필요. 반공교육, 상대에 대한 적개감만 불러일으키는 교육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필요
- 강원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특정 학년에 1개 학급만 있는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중 학급교체가 가능하지 않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거나 피해학생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모색 필요
-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순회교사의 처우 개선 필요
- 지역별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무상교복 지원에 관심을 가질 것
-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수영 실기교육을 10시간이상 편성·운영할 것이 권장되나, 강원도는 초등수영 실기교육 실시율이 전국 최하라는 지적
-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휴교령이 내리고, 국가재난안전대책 2단계 대응태세로 격상되는 등 도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기에 충남·강원·세종·전북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촉구 기자회견하러 서울에 올라왔음을 지적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경상북도교육청】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인력충원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필요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 마련 필요
- 내년부터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빨리 확대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무상교복·고교무상교육에 관한 의견·계획
- 비리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견, 지원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담보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초중고 통폐합 학교가 늘어나면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및 문제해결 노력 필요
-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필요
- 사서교사를 정원내로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
- 코딩 교육을 위한 기자재 확보, 전문교사 충원 등을 통하여 아이들이 정보화시대에 선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순회교사의 처우 개선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인 1%를 채울 필요
- 영광학교 현지지원 장학과정에서 발생한 장학관과 장학사의 우려스러운 발언에 대해 조사할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충청남도교육청】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인력충원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필요
- 충남의 학교 내 상담시설(Wee클래스) 설치율은 31.3%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상담인력 충원 등 Wee클래스 및 Wee프로젝트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상담시설로 운영할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 마련 필요
- 성범죄 교원 관련
 - 엄격한 징계기준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징계위원회 구성에 유념할 필요
 -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처리결과, 모든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 의향이 있는지
 -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필요
-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필요
- 다른 시도에 비해 라돈 기준치 이상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학교가 많

은데 다른 예산보다 안전 예산을 더 배정하고, 교실을 위층에 배치, 측정기 설치, 환기 등을 실시할 필요

-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네이밍에 관해 연구할 필요
- 사서교사를 정원내로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
-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휴교령이 내리고, 국가재난안전대책 2단계 대응태세로 격상되는 등 도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기에 충남·강원·세종·전북교육감은 전교조 범외노조 취소촉구 기자회견하러 서울에 올라왔음을 지적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충청북도교육청】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인력충원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필요
- 충북의 학교 내 상담시설(Wee클래스) 설치율은 20.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상담인력 충원 등 Wee클래스 및 Wee프로젝트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상담시설로 운영할 것
- 성범죄 교원 관련
 -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처리결과, 모든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 의향이 있는지
 -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필요
- 다른 시도에 비해 라돈 기준치 이상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학교가 많은데 다른 예산보다 안전 예산을 더 배정하고, 교실을 위층에 배치,

측정기 설치, 환기 등을 실시할 필요

- 장애학생 전국체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조치할 필요
- 1,500만원을 지출하여 만든 ‘위드 다문화’앱는 이용자가 19명임. 교육청에서 앱을 만들 때 불필요한 앱은 사전에 점검하고 나중에도 이것에 대한 문책을 할 필요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필요
- 충북교육청 인수위원이 충북교육청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불공정성,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업체에의 위탁을 고려할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경상남도교육청】

-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 필요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검토 필요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

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 보고 필요

○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필요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필요

○ 학생의 여교사 신체 일부 불법 촬영 및 유포 관련

－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 진술 부여 등 법에서 정한 적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

－ 교사들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배임·회계부정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개선할 필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 필요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거제 아파트 입주민 초등학생 통학편의 지원금 변경 재협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방안을 보고 필요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 검토 필요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상담 강화 등 대책을 마련 필요

○ 보편적 가치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비교육적인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를 재고할 필요

- 교원 성비위 사건을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 필요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필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필요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 필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파악 필요
- 가포고등학교를 창원 북면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부재한 측면에서 고려 필요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필요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교육청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 필요
- 내년에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무상교복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광주광역시교육청】

-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에 관한 검토 및 방침 필요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검토
필요
- 성비위 신고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 사실이 최종적으로 밝혀
지는 경우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
- 남북교육 교류사업 관련, 북한 방문시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 준비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
-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필요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필요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
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 필요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
한 대책 검토 필요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상담 강화 등 대책을
마련 필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교원 성비위 사건을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 필요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필요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 필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파악 필요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필요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 필요
- 지역별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무상교복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울산광역시교육청】

-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 필요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검토

필요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
-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필요
 -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필요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 필요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 검토 필요
- 2017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2%인데 울산은 2.06%로 상당히 떨어지고,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비율이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함. 두 부분을 개선할 필요
- 교원 성비위 사건을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 필요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필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필요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 필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파악 필요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필요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 필요
- 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명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보고하고, 빠른 시간안에 급식실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형 돌봄자람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
- 옐로우카펫 설치 장소 확대와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할 필요
-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이용자 중심·국가차원 통합 성과평가 체계 마련 필요
-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 필요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검토 필요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 필요

- 부산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보급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 필요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필요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필요
-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문제, 경제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 2015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측면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 검토 필요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상담 강화 등 대책을 마련 필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에너지 절약성고가 공공기관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혹한기나 혹서기 교실 기준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 교원 성비위 사건을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필요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 필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파악 필요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필요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교육청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전라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고사관리 감독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 필요
- 농촌 도서지역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부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대책 필요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검토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 보고 필요
-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필요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필요
- 목포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필요
-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필요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다문화학생의 수가 많으므로 교육부와 상의하여 선도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필요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시 법적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이 실행되도록 연구할 필요
- 문태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경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 검토 필요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상담 강화 등 대책을 마련 필요
- 교원 성비위 사건을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 필요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필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필요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 필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파악 필요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필요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교육청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전라북도교육청】

- 장애인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 필요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검토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 보고 필요
- 학교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의 시행을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교육감·노동조합·피고발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설치와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명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 빠른 시간안에 급식실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필요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필요
- 전북의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이 66.8%로 전국 평균 96%에 비해 유독 낮은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 필요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다문화학생의 수가 많으므로 교육부와 상의하여 선도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필요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시 법적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이 실행되도록 연구할 필요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 검토 필요
- 교원 성비위 사건을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 필요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필요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 필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파악 필요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필요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교육청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한국사 보조교재의 내용이 전교조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에 관한 의견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 필요
- 전북교육청이 주도하여 공동제작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현대사 일부분이 편향되게 서술되었다는 지적
-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휴교령이 내리고, 국가재난안전대책 2단계 대응태세로 격상되는 등 도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기에 충남·강원·세종·전북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하러 서울에 올라왔음을 지적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소액계약에 관해서도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임차료가 비싼 호텔, 특정 호텔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임차료가 무료이거나 낮은 공공시설을 적극 이용해 예산 절감에 노력할 필요
-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 필요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검토 필요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 보고 필요
-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필요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필요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 필요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문제, 경제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 2015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측면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 검토 필요
- 교원 성비위 사건을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 필요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필요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 필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파악 필요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필요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 필요
- 지역별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무상교복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시는 2030년까지 총 168개 신설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개발과 미래수요를 고려한 학교설립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위해 미래 수요에 대비할 필요
-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 필요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검토 필요
-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 필요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 재검토 및 개선 필요,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필요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필요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 검토 필요
- 교원 성비위 사건을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 필요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필요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할 필요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 필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파악 필요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필요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 필요
-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타 시도교육청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에 비해 세종시는 공기교환장치를 선제적으로 설치한 이유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 보고 필요
-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휴교령이 내리고, 국가재난안전대책 2단계 대응태세로 격상되는 등 도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기에 충남·강원·세종·전북교육감은 전교조 범외노조 취소촉구 기자회견하러 서울에 올라왔음을 지적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고 필요

3.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공통사항】

- 유학생 언어기준 충족률이 저조하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학교에 무보수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급여를 수령하는 등 관리에 허점이 존재하므로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부실 학회 및 학술지 참석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원금 환수 및 징계 방안을 마련하며 부실 학회 및 학술지를 검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모든 기숙사가 매 학기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기숙사생들의 훈련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인이나 동료 교직원의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적발해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논문저자의 조건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정신건강센터 상담, 검사 및 치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 신상을 기재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
-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성비위 사건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학생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내진성능평가지 불법적인 하도급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내진성능평가 추진 속도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청소근로자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교수들의 연구비 편취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형료 지출항목 중 회의비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식비는 교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학평의회를 건설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의 개선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각 국립대학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필요
- 통합학위제 도입을 통해 국립대학간 공동협력 및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

【경북대학교】

- 학교 인근 주민들과 기숙사 수용인원을 감축하기로 협의한 것과 관련하여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 학기 기숙사 수용인원 결정에 있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강의에서 고인을 비하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08년 권력형 성비위를 저지른 교수가 최근 보직교수에 임명된 것과 관련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고 재발방지 및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상주캠퍼스 통합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고 상주캠퍼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입학전형료 산정시 학교건물 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할 필요
-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경북대발전기금 이사들 중 대부분은 총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을 개선할 필요
-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육 자료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전북대학교】

- 낙후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강의에서 고인을 비하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년도 시험지 유출 등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 지역인재 전형의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3년 재학자가 아닌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했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을 해당 지역에서 다닌 학생들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2019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을 변경·번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관련
 - 정부출연연구소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2013년 협상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2018년까지만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 예산을 삭감할 필요
- 학교 내 갑질 및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가 미흡한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내부고발자들이 부담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

【부산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학내 성범죄 문제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육 자료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

이 없도록 할 필요

- 양산캠퍼스 개발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
-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국립대학 통합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국립대학 통합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
- 예체능 계열의 등록금이 비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

【강원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봉사프로그램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
-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육 자료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경상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공립대학 공동입학 및 공동학위제 관련
 - 공동입학 및 공동학위제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이를 추진하는 경우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지

- 국가 전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추진할 필요

【전남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창업펀드 투자 실적이 저조하므로 광주·전남지역 대학 연합으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투자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의 통합 이후 여수캠퍼스가 고사 위기에 처하고 지역경제도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향후 학과 이전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등을 포함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 전남대 의과대학의 경우 18년 동안 해당 과목을 담당한 교수를 일방적으로 강의에서 제외하는 등 불법적인 학사업무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

【충남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원외입학으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 총장선출방식 관련
 - 교수평의회에서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대학본부에 학칙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직선제로의 전환에 의지를 가질 필요

-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육 자료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소속 교원이 허위로 겸직허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
-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무보수를 조건으로 영리업체의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보수를 받아 허가신청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충남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는 보수지급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겸직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

【충북대학교】

- 자체감사에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시설 안전 문제를 개선할 필요
- 허술한 학위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제주대학교】

- 성희롱, 폭언, 서적 강매, 특허 도용 등의 갑질을 저지른 모 교수의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징계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MOOC 강의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
-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가 2개에 불과한데 이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총장공백사태 관련
 - 2014년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고 교육부로부터 임용제청을 받지 못했는데 관련 공문을 받았는지 및 임용제청 거부 사유가 적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 검증과정에서 사정조사팀이 광우병 쇠고기 파동 시국선언과 관련한 질문도 하였는지 여부
 - 총장공백사태 관련 소송에서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이번 정부에서는 총장에 정식 임명되었는데, 지난 정부의 인사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재 방치되고 있는 舊남부학습센터를 시민의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검토할 필요
-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

【서울교육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
- 향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할 필요
- 기숙사 성희롱 낙서 사건 관련
 - 성희롱 낙서를 지우고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측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 학생의 안전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

견은 무엇인지

- 범죄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학생부 의무 제출 위헌 결정 관련
 -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모집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현재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온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는지
 - 위헌 결정 후 입시요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교수가 자녀 대입전형에 제자의 석사논문을 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
- 교대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임용시험과의 괴리가 크고 집필고사의 비중이 과도하며 실기능력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신입생이 다양한 관점에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별 교원 쏠림을 고려할 필요
- 해외 한국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수업을 위한 교대의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전공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대학평의회를 설치할 필요

- 향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를 늘려나갈 필요
-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철도아카데미는 전임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실습 시간을 축소하여 진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바 있는데 향후 부실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학사관리를 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
- 학생 및 조교등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직원 가족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채용된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기숙사 식권 강매행위 및 기숙사비, 식비 일시납입은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활용해서 학회지에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교내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
- VR기기를 이용한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검토할 필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향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를 늘려나갈 필요
- 사립대에서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강사들이 강의 경력을 부풀려서 국립대 및 사립대에 지원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 총장 선출 제도 관련
 -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한 바

-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 학생과 교원등은 배제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선거관리 역할 뿐만 아니라 투표권도 가지고 있는 등의 우려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총장 선출을 강행할 예정인지
-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학내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학생들을 총장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정치적으로 혼탁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
 -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 협회나 연구회 등으로 우회하여 체결한 연구용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
 - 서울대 팩트체크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서울대가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내실있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매년 줄어 들고 있으므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불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 갑질 교수에게 피해를 받은 학생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노력을 기울이고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마련할 필요
 - 특허권 양도를 산학협력단 부장의 전결사항으로 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특허권을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고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관리규정을 위반하였고 학교는 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

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서울시가 공개한 에너지다소비건물에 6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
- 성비위를 저지른 수의대 교수를 솜방망이 징계한 사건과 관련하여 은폐시도 의혹을 조사하고 엄중히 징계할 필요
- 대입전형을 수능 1년 6개월전에 발표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하여 교육부의 수능 입시 30% 확대 권고를 반영할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서울대 학종전형을 살펴보면 25명의 전임입학사정관이 18,905명의 지원서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야했고, 현재 자체운영하는 회피·제척 시스템은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등록된 직계자녀를 확인할 뿐, 4촌은 확인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편입이나 대학원 입학에 대해서는 회피·제척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시험성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HK교수는 총장선출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안식년 제도가 없는 등 HK교수를 전임교원과 차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규직전환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다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충분한 것인지 확인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서울대 기간제 정규직 전환 현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지적
-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해 외부인사를 1/2이상으로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대

각 기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

- 서울대인권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는 젠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서울대 인권센터의 1대1 상담교육 중 거의 대부분은 외부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피신고자는 외부기관에서 지정된 특정 강사에게 4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강사의 전문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
- 여성교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규장각 내 문화재 자료의 보존상태가 열악하므로 소유권 문제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이사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필요
- 서울대에서 학위를 받은 국내 및 외국 학생의 해외·국내 취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
- 가처분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들에 대한 징계 취소 및 항소 포기를 검토할 필요
- 사외이사 제도가 변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실험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계열별 등록금 차등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등록금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공계 지원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는 문화재 보존수리가 중요성 및 시급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규장각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닌지

- 산림과학부와 화학생물공학부 등의 연구팀이 지류보존처리, 밀랍본 실록 복원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학과간 시너지 사업·연구가 추진될 필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대학평의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차입금 이자 부담 관련
 - 법인화를 위한 1,500억원의 차입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발생할 이자는 158억원으로 매달 약 4억원씩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총장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학교 재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 인천시에 장기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협약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할 필요
-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관련
 - 청소근로자 1명당 5층 건물을 혼자 담당하는 등 업무 강도가 과중하고 1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용역 업체와 학교 간 계약 과정에서 임금을 깎이는 등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산학협력단에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간접고용이라는 의견이 있고 본부와 소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업무의 질 문제 등은 되풀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고용을 할 생각은 없는지
 - 청소근로자의 인원충원과 직접고용을 통해 깨끗한 학습공간을 만들고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요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9명 중 7명이 학교측 인사이고 노사관계 전문가나 노동계 추천인사는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을 재검토 할 필요

- 자체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정산하지 않거나 연구실적물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연구비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하는 등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교차원에서 징계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인천 시민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민주화를 기념할만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동문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많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 교수, 무기계약직원 등의 여러 채용과정에서 보은성 인사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대학재정 확충, 산학협력단 연구기금 확충 등 재정 및 예산 분야의 공약 이행도가 낮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계열별 등록금 차등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등록금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도서관 확충 및 우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

4.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공통사항】

-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간호사 대기 순번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
- 응급실 등 병원 내 폭행·난동이 급증하여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보안 지침 및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할 필요
- 저조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를 개선할 필요
- 병원 내 다양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할 필요
- 병리학이나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가 아예 없는 병원들도 있는 등 일부분야의 전공의 부족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
- 대학병원이 광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
- 주 52시간 근무체계에 따른 병원내 인력수급, 환자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수술보조인력의 불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의료분쟁을 대비하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외국인 근로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통역서비스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2016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강원대병원·충남대병원에 채용된 직원 중 110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여서 고용세습 의혹이 있다는 지적

- 고령화 추세로 인해 고령자 진료비 규모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은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찾아가는 의료-방문진료’ 제도를 도입하여 4차산업혁명을 활용할 필요
- 2010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기관 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가정간호가 포함되었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의뢰환자수, 총방문수가 감소한다는 지적
- 간호사만 방문하다보니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소독 등 간단한 치료만 가능하고 급성환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의사의 방문진료도 허용할 필요

【서울대학교병원】

- 방문진료 관련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간호사와 함께 의사도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1차, 2차, 3차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배와 체계적인 의료전달시스템 구축이 필요
 - 서울대학교병원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
- 허위 의견서 작성을 강제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
- 응급실 등 병원 내 폭행·난동이 급증하여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보안 지침 및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할 필요

○ 채용비리 관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차례의 정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 학교별로 대학성적을 차등반영하였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인지
-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본원 비정규직 지원자에 대하여 모집 공고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가점을 부여하였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인지
-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 직원의 자녀 등 가족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헬스커넥트 관련

- 2014년 발생한 약 40억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과 2014년 이후 연구개발이 중단된 사실이 관련이 있는지
- 현재 사업은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매출이익,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지
- 연구개발 투자가 없고 손실에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헬스커넥트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헬스커넥트의 실적 개선은 언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에 실적 개선이 어렵다면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은 무엇인지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

○ 국정농단 및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한 도의적은 책임을 질 필요

○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저조한 서비스평가 결과를 개선할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

- 내방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환자의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이지케어텍이 상장될 경우 의대 교수 및 가족 등 내부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의대 교수 및 가족 등 내부자들이 이지케어텍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병원 내부자들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필요
- 당기순이익 이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은 병원이 과도한 시설투자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순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의약품 입찰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
- 다른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정밀의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지역 거점 공공병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매년 적자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진료비 감면 규모를 축소할 필요
-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의 의약품입찰 관련
 - 타 공공의료기관과 달리 특정 제약사의 특정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리베이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적격심사의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대 보라매병원은 모든 물품을 동등한 물품으로 평가하여 동등과 유사의 구분을 무시했다는 지적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나, 첨부서류 없이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제로는 기준미달 결격업체임에도 만점처리, 낙찰되었다는 지적

【부산대학교병원】

-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4개월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
-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방문진료 및 원격진료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명예퇴직금이 타 국립대병원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유는 무엇인지
- 부채가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면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할 필요

【강원대학교병원】

- HIV 및 결핵 감염자를 검사 없이 수술하고 자격이 없는 수술보조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들의 성범죄 및 갑질을 철저히 조사한 후 가해자를 징계할 필요가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간호사 퇴직률이 다른 국립대병원보다도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전북대학교병원】

-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병원 전현직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원과정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거짓증언, 허위보고 및 조직적 은폐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
- 군산 전북대병원 관련
 -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추경예산으로 80억원을 배정하고도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교부 및 집행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

【충남대학교병원】

-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필요

【경상대학교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필요

【경북대학교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필요
- 외상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었는데 각오는 무엇인지

【전남대학교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필요
- 방문진료 및 원격진료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충북대학교병원】

- 의료중재원의 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불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제주대학교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필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여성 응시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등 직원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필요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필요
- 규모가 작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최근 경영평가 결과 등급이 하락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5.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제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내부규정을 통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
-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관련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재단은 폐쇄 뿐만 아니라 폐지 대학 전반에 대해 지원·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로 수정할 필요
 - 폐교 대학은 대부분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재단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나, 재단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폐교대학 구성원 학사 지원 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폐교대학 사후지원 및 관리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
 - 대학구조개혁의 현실화에 따라 대학 폐교 증가가 예상되나 신속·공정한 폐교대학 자산관리 주체가 부재하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
- 행복기숙사 관련
 - 수도권 및 사립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 및 기숙사 수가 부족한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더욱 많은 기숙사를 보급할 필요
 -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
 - 대학가 인근 지역의 기숙사 건립은 기존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학가와 거리가 있더라도

학생들의 등하교가 용이한 지역을 행복기숙사 입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당초 계획 대비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 기숙사에서 재해 대피 훈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숙사 사업 외에도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2014년 계성학원에서 학교부지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쓰지 않았다는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사학진흥재단에서 100억원의 용자를 한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함에도, 사이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 협약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
- 독학학위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전공 수를 증설할 필요
- 비문해인구가 311만명에 이르고 농산어촌이 대도시에 비해 더 많으며,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인 상황에서 내실있는 문해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KOCW의 중복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시청, 의회 등에 평생교육 직렬 배치 등 공공성, 전문성 및 연속성의 측면에서 평생교육사의 안정적 처우 개선대책을 검토할 필요
- 평생교육사의 공공성, 전문성, 연속성 측면에서 직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동북아역사재단】

- 2014~2018년 8월 말 현재까지 15회 개최된 이사회의 불참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부처 및 유관 공공기관 인사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 10명 중 평균 6명이 불참했고 10명 전원이 불참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
-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관에서는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역사 왜곡 및 표기 오류 발굴을 34건 했으나 그 중 7건만 정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관련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
- 동북아역사재단은 연구활동은 물론 홍보와 교육 표기 오류 등을 발견·시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나, 역사 왜곡 및 표기 오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요한 인력이 축소되는 상황이며, 유관기관들과 제대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할 필요
- 유튜브를 통한 동북아역사 독도 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
- 대마도, 간도, 백두산 문제에 대한 연구,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
- 독도 문제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
- 일본은 꾸준하게 독도 침탈논리를 개발하여 민간, 학계 등 모든 분야에 역사왜곡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
- 동아시아 영토·해양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현저히 감소 추세이므로 독도 역사왜곡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

-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 부실집행에 대한 회수 관련 소송과정에서 내부결재 및 교육부 보고 없이 청구가액을 10억 7,000만원에서 6억 1,500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제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내부규정을 통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
- 5년(2014~2018.9) 간 2017년도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사회 디지털교과서에서는 639건, 과학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654건의 오류가 발생·수정하였는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사, 학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발견 또는 접수 시 교육부에 조속히 통보하여 신속하게 시정할 필요
-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 학년의 영어·사회·과학 과목의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었으나, 여전히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이 존재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필수적인 스마트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는 상황
- 현재 디지털교과서 적용 중인 3개 교과 외 추가로 다른 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은 없는지
- 스마트기기 중독, 시력 저하, 사회성 약화, 뇌기능 저하 등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
- 3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원시적 오류가 반복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4세대 개편 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30시간 선도교원 연수는 내실있는 교육 및 사교육 방지에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통계성 자료 처리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
- 미래교육에 대해서 축적된 자료 등을 향후 설치될 미래교육위원회에 충실히 보고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한국연구재단】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제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내부규정을 통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
-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의 전수조사 결과 최근 5년 간 108개 기관, 1,317명이 1,578회 부실학회를 참여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은 265명의 연구자에게 최근 3년간 부실학회 참여 출장비용으로 5억 8,742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지적
- 인문사회 분야 R&D 예산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추가 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인문사회분야 R&D 예산집행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인문학진흥사무국의 기능이 확대된 만큼 관리비의 지원 등 충실한 업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울대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 관련하여 엄격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한국장학재단】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제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내부규정을 통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
- 최근 5년간 중복지원이 많이 발생하고 아직 미반환된 경우도 있으며, 소득분위 9분위 이상인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혜택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학자금 대출 운용 관련
 -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금융기관도 취약·연체차주에 대해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로 인하하려는데 비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고등교육 기회를 지원하려는 장학재단은 지연배상금률이 연체기간에 따라 7~9%로 적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 2005년~2009년에 시행된 보증부학자금대출은 평균대출금리가 7.11%이어서 현재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훨씬 높으므로, 전환대출을 통해 채무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조치의 실적이 저조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편의를 위한 조치 필요
- 예체능 계열의 등록금은 의대 바로 다음으로 많은데도, 재단의 국가 우수장학금은 3학년부턴 수혜대상이 한정되고, 타 계열보다 50만원 적으며 생활비는 잔액이 있을 때만 지원한다고 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

-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 학생에 대한 우수학생 국가장학제도가 부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 4년제 대학 졸업 후 전문대 입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한 완화 대책, 전문대 수업 연한 다양화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생활비 대출은 향후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등 리스크가 있으나, 현재 대출 시 교육은 온라인 문제 풀이 및 관련 플래시 영상 시청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 생활비 대출을 받고 휴학하는 등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방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는 시급히 해결할 문제이므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의 5천명 수용인원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
-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12,000명, 장기미상환금액 944억원이 발생하였음. 청년 취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는 체계를 보다 완화하는 것을 검토 필요
- 성동구에 건립 추진 중인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 현재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부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한국 장학재단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3개월 초과 연체 시 9%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
- 미취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늦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학생 중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허용되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1회 추가연장을 일반 학생으로 확대하고, 이미 거치기간을 지나 연체금이 쌓이고 있는 채무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급격한 금리인상 지양 등 대학생들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
- 과거 고금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전환대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학현장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센터를 확충할 필요
-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응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미신청자가 상당하므로, 대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을 수행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강화할 필요
- 멘토의 대도시 거주 등에 따라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에서 시골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 선정률이 낮은 것은 형평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멘토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 또는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분석작업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근로장학금 집행 관련, 교외근로장학금은 초과 집행되었으나, 교내근로는 집행 잔액 존재. 근로유형별 집행 계획 사전 검토가 미비하므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이용자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재 5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3개월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해외유학 및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6개월 이상 출국자에 대해서 신고와 상환 의무 안내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출국자로 확대할 필요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자 면제를 검토할 필요
- 서울 뿐만 아니라 의정부 등 새로운 대학이 많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전문대 학생에 대한 기숙사를 오픈할 필요

- 기숙사 사업 외에도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해외 이주 및 해외 유학 신고자 중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자의 미상환금액이 상당함에도 미상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
- 근로장학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득분위 산정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초·중등교육에서도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 파란사다리 사업의 효과성 및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외국교과서 내용 개선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사업 성과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은 감액되어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한국학 진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
- 해외 한국학지원 사업예산이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 해외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시설 개선 등 한국의 문화 위상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관련

- 외국인 기혼자를 위한 가족 기숙사 시설을 마련할 필요
- 2인 이상 1실을 축소하고 1인 1실 형태 기숙사를 늘려나갈 방안 모색 필요
- 졸업생에게도 일정기간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10년 간 외국인 입학생의 국적은 상위 6개국 출신 학생이 60.0%, 상위 9개국 출신 학생이 69.8%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 장서각 소장자료 보존·관리 관련
 - 소장자료 20만건에 대하여 연간 1만건 가량의 상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태조사 완료까지 20년이 소요된다면 상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 소장자료 중 4,822건의 자료훼손이 확인되고 그 중 60건은 주요 문화유산인데,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
 - 소장자료에 대한 상태조사, 보존처리 담당인력이 5인으로, 보존작업이 다소 더딘 것이 인력부족 또는 지원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 서책 등 소장자료의 보존, 활용을 위하여 규장각, 중앙박물관과 통합적으로 실태조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국가보안법 비난 및 군사분계선 관련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원장의 분단체제 인식에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
- 규정에 위배된 업무처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관의 갑질 관행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할 필요

【한국고전번역원】

- 최근 5년 간 고전번역교육원(서울, 전주, 밀양)의 입학지원율은 높은 반면 졸업자 수는 당초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연수과

- 정 이수에 따른 정식학위의 부재, 전문역자의 낮은 처우 및 한국고전번역원의 연수과정 이수생에 대한 일자리 부족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
- 2018년부터 시작되는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과 승정원일기 등 번역사업에 소요되는 전문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번역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AI 활용, 전문가 외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등을 통하여 승정원 일기 등의 번역사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고전번역대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른 기회전형의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 대학의 상담센터의 전임 상담원 수 부족 등으로 상담 대기시간이 상당히 긴 사례가 있고 상담센터장의 전공이 상담과 무관한 경우가 다수라는 지적
- 매년 증가하는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검정고시생에 대한 대체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수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
- 전북대에서 수시 전형에 임박하여 두 차례 수시 전형을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고, 대교협이 시정권고 및 유예기간 설정 등에서 일관성이 없는 행태를 보였는바, 향후 사전예고제 및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 유학생 수를 늘리는 교육부의 시스템에 따라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둔 유학생 증가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또는 미성년 공저자가 있는 논문에 대한 미제출 학교들에 대한 조치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개정 강사법에 따른 대학의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 2011년 교육부가 대교협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위탁협약’을 맺어 대교협이 회피제척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2014년 8월에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2015년 8개 학교, 2016년 2개 학교만이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지적
 -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특수관계인이 회피제척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되어 현행 대학자체 회피제척시스템으로는 대입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감사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법령 개선을 추진하지 않고 대학자체 회피제척시스템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현재 배포된 ‘학생부종합전형 회피제척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교협이 적극 관리·감독할 필요
 -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교협의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하는 대입전형기본사항의 지역인재 기준은 ‘고등학교 3년을 다닌 경우’인데 반해 전북대가 추진했던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거주지 또는 중학교 졸업소재지 요건을 포함하였으므로 어떤 것이 지역인재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방대육성법을 관장하는 교육부의 검토가 필요함. 전북대와 같은 지원자격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의 대통령령

을 법령의 취지를 명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무조건 고등학교로만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대교협에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2017년도 국정감사 당시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향으로 교육부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지역적으로 고루 개최할 것 등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 등록금 수입의 지속적 감소 및 인건비·운영비 등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전문대학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매년 증가하는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취업난에 따라 확대되는 유턴 입학자를 배려하기 위한 수업 연한, 장학금 제도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
- 개정 강사법에 따른 대학의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한국교직원공제회】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제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내부규정을 통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
- 대용진단 계약 등에서 모집인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문서 위·변조를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지적

- S2B 학교장터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중 절반 가량인 108억이 구매자인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 지역업체 구매 쿠퍼제 도입, 지역업체 검색 카테고리 구분 등 S2B 도입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법령상 공매도는 가능하나 지양할 필요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총연장이 36.6%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는바 신공항하이웨이 지분의 45.0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교원나라 B2B 관련 결제조건, 지역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B2B와 관련하여 계약업무처리 규칙과 지침이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계약업무 처리규칙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자연인 외 사학법인 단체 등도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할 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제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내부규정을 통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
- 2016~2018년간 15일 미만 근무하고도 월보수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11건에 달하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인건비를

일할계산하도록 하므로 개선할 필요

○ 사학연금 적립금 관련

- 국립대학병원 가입을 통해 적립금 고갈 시점은 늦췄지만 향후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적립금 고갈 문제를 자구책 마련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 지급 보장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지적
- 2001년 제도개혁 이전 퇴직당시 보수월액을 기초로 연금액이 산정돼 불입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기대수명 연장으로 기금고갈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
-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손실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안전성이 담보된 투자전략을 세우는 한편, 투자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

- 2013년에서 2018년 7월말에 이르기까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19억 4,3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5억 7,6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라는 지적
- 2016, 2017년 사학연금 부당수급액이 201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부당수급이 반복되고 있으며, 부당수급액 환수율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 및 환수 불가능 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0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520건, 총 29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사립유치원 비정규직 고용시 4대보험 대신 사학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비정규직이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
-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사무직원”과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계가 모호

하여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자가 사학연금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사학연금 가입 시 단기간 근로자는 여러 불이익이 있는 반면 사립학교 법인 등은 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5년 간 매해 사학연금 탈퇴자 중 2년 미만 근로자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학연금 가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지적

- 2017년말 기준으로 법정부담금의 미수금이 1,905억원에 달하므로 국가부담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미수금을 해소할 필요
- 2013~2018년 동안 총 2,445명 52억 1천만원의 급여청구권이 급여 미청구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지적
- 다른 연기금에 비하여 주식 의결권행사 관련 반대비율이 낮아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사학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학연금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의결권행사를 투자전략팀장이 결정하는 비율이 99.6%에 이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좀 더 많은 종목을 주식의결권행사심의위원회나 자금운용관리단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사학연금의 공매도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의 노력은 지양할 필요
- 수익 창출, 투자전문가의 유치, 전문위탁 등을 통해 사학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불안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연금기금 고갈과 관련하여 현재 납부한 비용에 비해 과도한 수혜를 받는 사례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허위 품의서 작성을 통한 항목에 없는 불법 예산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교육부 및 소속기관

<일반 사항>

-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의 경우 국무총리가 의장인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간사를 맡고 있고, 지원인원이 82명,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보가 간사를 맡고 지원인력 107명, 이에 비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이 간사를 맡고 지원인력도 12명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교육부에서 캠퍼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학교신뢰도가 99년 32.7%에서 2017년 15%로,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동 기간 34%에서 19.7%로 낮아졌는데, 이러한 신뢰도 저하는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포함한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행정처분 등을 당한 교원들의 처분 철회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행정처분 철회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에 대하여 법에 따른 강제이행명령, 직권면직 등 불법상태 해소를 위하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성과급 균등분배는 규정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며,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취합하고 대응방안을 보고할 것
-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한 선배 공직자들의 청탁

을 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하고, 재취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것

- 교육부는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7개 일선교육청을 전수조사하여 추진의지, 지연사유, 예산확보현황, 추진실적, RFID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취합하여 보고할 것
-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센터의 고급 인력 확충, 교육청 보안관제센터 확대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안전공제회 등의 공제회 통합 및 서비스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관련 기본통계시스템을 정비할 것
- 아동학대를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안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매뉴얼을 구축할 것
- 공익제보자 보호장치에 대해 현재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익제보교사가 부당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시·도마다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이 다른데, 교육부에서 일관성있는 매뉴얼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점담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맞춤형일자리 업무 내용 및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비 낙찰차액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것
- 탈북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대학교육을 중도포기하더라도 직업·평생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급격한 사회변화와 계층·세대·성별 갈등이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스쿨 미투에 대한 조직적 은폐 및 2차 가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응

하고, 징계시효가 지나더라도 수업배제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 ‘내게 꼭 맞는 혜택, 교육지원 한눈에’서비스 운영이 부실하므로 개선할 것
-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우선구매율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
-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발전 방안에 대하여 협력할 것
-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폭력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245,341명으로 전체 5대 범죄자 252만 2,640명 중 청소년이 9.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절도사건 53만 1,454명 중 청소년이 12만 7,749명(24.0%)으로, 청소년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 범법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최근에 백남기 농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대병원 측에서 정보기관, 청와대하고 수시로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들이 확인되었지만, 서창석 병원장은 이를 계속 부인해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교육부는 국보법 사범 4명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인천 교육감이 이에 반하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교육부는 인천 교육감을 대상으로 복직명령 철회 및 직위해제처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직무이행명령, 시정명령, 인천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혐의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 교육부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기재부 지침에 맞게 퇴직월 보수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침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
- 교육부 전문분야임에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교육 문

제를 넘기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지양할 것

- 교육부가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할 텐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
- 단기간 근로자의 사학연금 가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책무가 교육청과 사학연금을 총괄·관리하는 교육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학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선호를 잘 파악하고, 사학연금 가입을 개인적 유·불리를 위해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
- 사학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것

<유아 및 특수교육 관련>

- 유치원 회계비리 관련
 - 유치원에 대한 정기 감사가 없었고, 시·도별 감사 횟수, 감사 기준 등 감사에 있어서 격차가 있는 등 현재의 감사 시스템이 부실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감사관 1,2명이 200,300개 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담당하는 등 감사인력 부족 문제, 혹은 유착 의혹 등의 문제가 있기에 시민감사관제도가 더 활용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교육부도 제도 관련 사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역할을 다 할 것
 - 회계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책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등을 정비할 것
 - 사립유치원 비리는 개인의 부도덕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 자격제한을 강화할 것

- 사립유치원의 에듀과인 적용, 행정인력 지원, 사유재산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기존 사립유치원 체제를 재정비할 것
- 유치원 알리미가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유치원 공시사항에는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부 2018년도 유치원정보공시지침서는 시정명령을 1회 요구하고 즉시 이행하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신규 아파트단지 등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학습권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휴·폐원시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하나, 법령상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
- 2017년 발표한 유치원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의 대책과 비교하고, 주요 진행경과를 보고할 것

○ 유치원안전 관련

- 상도유치원으로 돌아간 122명의 원생들은 상도초 교육과정반과 방과후과정반으로 배치되어 교육받고 있고 정서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교육 정상화에 노력할 것
- 서울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 특이사항으로 분류된 15곳의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점검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 것

○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대표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종교단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등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명의변경의

경우 원활한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 또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전 조사방식에 대해 점검할 것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노력할 것
- 특수학교 공립전환이라는 중장기 대책 외에 교사 순환발령 등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시할 것

○ 점자 교과서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초·중등교육 관련>

○ 학제 개편은 교육 전반의 개혁, 사회 전반의 변화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여태까지 제기된 다양한 학제 개편안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적극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고교 무상교육 관련

-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과 교복이 포함되도록 법제화할 것
- 2019년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 및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한부모·농어업인·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 전체 학생의 40% 이상의 고등학교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이 상당수 존재,

- 미납사유 파악 등 실태조사 할 것
- 대안학교는 현재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기회균등이나 보편타당의 원칙에 따라 예상되는 1인당 무상교육 지원금인 156만원 정도의 지원이 대안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것
- 무상교육이라는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논의되는데, 무상교육뿐 아니라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부모들의 책임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것
-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대학교 4년 정도로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은 초등교육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제이므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의향도 반영할 것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절한 교원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인건비 예산 절감 및 무상급식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학령인구감소 문제 관련
 - 저출산위원회 등이 오류를 수정한 인구추계를 토대로 최소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교원수급 계획을 세울 것
 - 학교, 학급, 학생 수는 줄어가나, 교육부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5년간 교육부 국유재산이나 시·도교육청 재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통폐합 실적은 저조,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쓰이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구조조정에 노력할 것
-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처분도 하지 않고 매년 재산을 늘려나가며 몸집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들에는 압박을 가하고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이 솔선수범하여 폐교는 정리하고 학교 통폐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 경제논리에 매몰돼서 지역 간 또 학부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학교총량제를 폐지하고, 보다 정교하고 다각적인 기준으로 학교의 신설과

통폐합 문제에 접근할 것

○ 사교육비 관련

- 교육부는 통계청과 2007년부터 11년째 사교육비 조사를 하고 있고, 매년 약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고 분석되어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교육부는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런 장기대응 말고도 단기 대책 또한 마련해나갈 것

○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학여행을 떠난 학교가 전국에서 97개교였는데, 비용 관계로 같은 학교 내에서 수학여행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해외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편법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하므로, 개선해나갈 것

○ 2017년도 기준 사립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이 28곳이 있는데, 헌법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고액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하므로, 개선해나갈 것

○ 기초학력 관련

-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국가 책임하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내실화방안을 마련할 것

- 미국의 경우 주별로 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주마다 거의 다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면서도, 그 기초학력 관련 자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지도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별 학습부진학생 현황을 교육부에서 정확히 파악할 것

○ 초등돌봄교실 관련

- 초등돌봄교실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로 편성된 교부금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고,

- 시설 운영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집행하도록 할 것
 - 초등돌봄전담사 약 1만 2천여 명 중 82%가 초단시간, 단시간 근무자이고, 특히 4시간 이상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고,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사태에 대하여 돌봄교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인건비를 시·도교육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할 것
 -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만큼 학교와 지역 뿐 아니라 아이들과 전담사들도 상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가 교재교구비를 정상지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문제풀이 식 수업을 지양하고, 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것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 작년 학생부 기록을 수정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 고교별 평균값으로 보면 17배 차이까지 나는데, 현재 나이스(NEIS)는 고친 로그인 기록만 남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교과전형, 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 정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기재과정과 항목 개선 및 그에 따른 학교 및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
- 학생부 조작으로 부정입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2018년 8월 교육부에서는 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비교과 항목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세워 나갈 것
- 자기소개서 표절로 올해 대학에서 탈락한 학생이 1,406명으로 표절방지를 위한 대책과 대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지역인재 기준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더 완화하는 것 모두가 지역인재전형을 특별전형으로 한 취지에 반함. 교육부는 전북대와 같은 지역인재전형이 지방대육성법의 취지인 것인지 검토하여 대교협에 안내하고 대교협은 이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할 것
- 학교안전 관련
 - 학교교사 또는 부속건물의 16.7%가 40년 이상 되었는데, 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
 - 1000m²이상의 3층 이상 건물에 대하여 학교가 내진설계를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시설에 내진설계를 한 건 2009년부터로, 약 12년 정도 된 학교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음. 건축물의 건축연도나 내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만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현재 학교 석면제거율은 23.6%으로 낮고, 지역별 제거 편차가 심하며,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 잔해물이 발견되는 문제 등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히 제거하고, 석면제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석면제거모니터단을 내실있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

- 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학교인접 공사여부를 미리 통지하여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석면 슬레이트와 비산먼지 대책을 협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통학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다른 사회관계장관들과 협의하여 통학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여 통학로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을 다할 것
- 교육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사를 마친 식중독 사고 26건 중 17건은 원인이 된 식품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무상급식’이 ‘무상 식중독’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근처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학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공영감리를 받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구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험위주로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을 지정하고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체험중심 안전교육과 ‘학교 밖’에서 실시해야 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
- 전문성 있는 체험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와 안전교육 지원방안, 안전 체험시설 활용방안을 협의할 것
- 다양한 학교건축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짓는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역별 양변기보급률 편차가 크므로 교육부가 전수조사 후 변기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법적 설치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스프링클러 설치율을 제고할 것
-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 학교 교실 내 공기질 기준을 환경부가 정하는 실외 공기질의 ‘ 좋음’수준으로 강화할 것

- 교육부가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한 권고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각 시·도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기본으로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공기청정기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을 하는 문제, 공기청정기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기계환기설비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등 기계환기설비에 비하여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공기청정기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환기청정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내 체육시설 등을 비롯하여 실내 공간 중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공기질 관리 대책을 만들어 보고할 것
- 초·중고 BTL시설 운영성과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생활형 SOC 사업 관련
 - 생활형 SOC 사업은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의 협의할 것
 - 시설안전관리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 공유할 것
 - 생활 SOC 예산을 통하여 돌봄교실이나 학교내 체육관, 학교 내 도서관을 리모델링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스쿨미투 관련
 - 교육부와 교육청은 스쿨미투 발생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하고 진상조사를 벌이며, 여론에 이끌려 대응하는 방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인데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고려할 것
 - 최근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생의 40.9%는 “교사들이 성희롱을 저지른다”고 했고, 27.7%는 “교사가 나를 성희롱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학교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심각한 문제, 교사들의 성범죄나 비위행위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교내 성비위의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가해교원의 징계처리결과
및 재직여부를 보고할 것
- 최소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재단이나 교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
당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학교재단이 아닌 교육부장
관이 임명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것

○ 장기무단결석, 학업중단 관련

- 소재파악 되지 않는 학생들을 신속히 찾아내야 하고, 장기무단결석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대·가출 여부 등 사유를 파악할 것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소관이 여가부로 되어있는데, 교육부 소관이나
최소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그 방안
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학교폭력 관련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감소하던 학
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7년 0.9%에서 2018년 1.3%로 증가하고, 목
격응답률도 2.6%에서 3.4%로 증가. 보다 현실적인 청소년 비행 예
방책과 사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처벌’위
주의 강력한 형태로 개정되었고,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학폭위에서 처리하고 생기부에 기록하
도록 있어,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학폭위가 열리거나 학폭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폭력행위가 은폐되는 등 갈등이 심각한데 이러
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실제 피해사실 없거나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지
속·반복하는 등 학폭위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 기각
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학폭과 관련하여 학교장 종결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다양한 부작용들이 예상되는데, 예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에 있어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부의 관련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피해 초기 단계에 상담, 보호조치 등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2017년 가해학생 특별교육 미이수율이 2.86%, 가해학생 학부모 미이수율이 4.58%로 높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 특별교육의 내용도 부실해 보이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개선할 것
- 학생간 성폭력 관련하여 가해학생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성폭력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나 다수 교육청의 관련 지침 미비로,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 학교폭력위원회의 기각률 등 실태조사를 거쳐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근본적으로 학내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창구 전체에 대해 상담사와 상담내용을 검토하고, 상담창구를 간소화하여 분야별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며 교육부차원의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들이 자살, 자해 관련 유해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 통계청 미성년자 자살현황 통계가 간 상이한 이유를 분석할 것
- 초등학교 Wee클래스의 확충 및 전문상담교사의 충원, Wee클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제고하고, 중장기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 Wee클래스 사업은 기존 전문상담교사와 업무가 중첩되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서비스를 학교나 학급단위로 운영하기보다 학생 수에 맞춰 질 중심의 교육지표를 개발할 것
- 초등교원의 연수 이수 비율은 가장 높은 교육청이 49%, 전북은 16%에 불과 하는 등 코딩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므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할 것
- 현행 교과용도서 공급체계는 이원화 및 지역별 다중공급에 따른 생산의 비효율성 문제,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수익악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는 독도에 대한 현장교육, 탐방교육 등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술행사, 연구, 체험을 지원하는 등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교육부 교육과정 집필기준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균형있게 기재하도록 명시할 것
- 교육 일선현장의 역사왜곡 등에 대해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인터넷 통일학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의 통일교육 지침서가 탑재되어 있는 등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을 추구하던 과거 정부의 기조가 남아있어 변화된 남북관계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교육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
- 진로체험기관 이용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면허가산수당은 정률(연봉액의 5%)로 지급하려는 취지로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증액할 것
- 영양교사 역시 조리사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 학교급식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친환경 건강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부는 학교 급식소의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 급식조리사가 방학 중에도 급식실 관리업무 등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였지만, 교육부는 1년 6개월이나 범위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을 준수해나갈 것
-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유실 설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교사 배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당 보건교사가 최소 한명이 되도록 할 것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학생건강관리 점검방안을 만들 것
-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제화 못지않게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양화를 추구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
- 홍콩한국국제학교가 한국과정, 국제과정 회계를 각각 분리하고, 이사회 구성시 학부모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가 되도록 관할 공관과 면밀히 협의할 것
- 한국학교장이 학교의 총괄책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017년 홍콩한국국제학교의 이사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고

- 발조치와 같은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규정 등을 개정할 것
- 한국학생과 다문화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및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교육청, 지자체와 논의할 것
 - 다문화가족센터 및 프로그램 수를 확충할 것
 - 중도입국 자녀가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학의 위탁채용유도를 위한 공·사립 동시지원시스템의 개발일정,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를 보고하고, 이 외에 위탁채용활성화와 사학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현직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 임용 1차시험 폐지 등 교원의 양성-임용-연수-평가-보상에 이르기까지 교육대학과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것
 -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중 내부위원과 외부 위원에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공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할 것, 공모제 시행에 대한 평가(장점, 단점, 부족한 점)와 보완책을 보고할 것
 - 교직 경력 4년차에 받은 1정 자격연수성적이 승진을 좌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초등교사는 다른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므로 중등교사도 함께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방안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보고할 것
 - 교육청과 MOU를 통해 소아암 환자 등을 위한 병원학교는 MOU상 위탁취소를 뚜렷하게 막을 근거 조항이 없는데, 일부 병원학교가 폐교 위기이므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할 것
 -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을 활용하여 연계성, 효과성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것
 - 과학중점학교가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이관되더라도 그 수와 예산

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부산의 해운대를 중심으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교육격차가 심한 상황으로, 부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에는 지역별 수학문화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현재 개관된 경남, 건설예정인 노원구까지 포함해도 2곳에 불과하므로 부산지역 등 수학문화관 추가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
-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에 수학관의 설치근거가 있고, 부산도 부산시교육청 자체예산 400억 이상을 투입하여 수학문화관을 설립하려고 있는데, 부산의 수학문화관 설립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고등교육 관련>

- 사립대학의 교원경력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우석대의 교원경력관리 현황은 전수조사할 것
- 사립대 교원의 경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육부는 우석대에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얼마나 발급하였는지, 다른 사립대는 어떠한지 등 전수조사와 함께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 외국인 유학생 수의 양적성장에 비해 질관리가 부진하므로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개선 등 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립학교 자율권 훼손 관련
 - 분규사학에 대해서도 전·현직이사협의체간 합의가 불발하는 경우 이사추천권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할 것
- 폐교 관련
 - 대학폐쇄 외의 다른 대안으로, 2010~2014년 실시되었던 ‘사립대학

경영 컨설팅'사업을 재추진하거나 심도있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것

- 현행 「사립학교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해서만 학생 수 격감으로 인해 그 목적이 곤란한 경우 폐교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도 동일한 사유에 따른 폐교를 허용하도록 확대할 것
- 사립학교 폐교시 교직원 체불임금 지급완료 후 잔여재산을 설립자나 재산출연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여 폐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
- 폐교대학 학생의 사후조치를 보다 신경써서 특별편입학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할 학교 학생과 피해학생간 갈등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 학령인구 감소, 대학 경영난 가중 등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폐교대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자발적 폐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유도·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 평가항목 설계, 평가위원 구성, 권역별 균형 등에 있어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비리 내부고발시 내부고발자가 불합리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자율 개선대학 선정을 당연탈락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각종 평가 및 진단으로 대학의 피로도가 상당하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대학기관인증평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지역이 서울지역과 같은 권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상대적 피해가 우려되고, 경인지역은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

- 수도권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률을 비교해보면, 각각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높는데, 이는 교육의 양극화, 지방 교육의 공동화, 지역경제의 붕괴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당시 지방대와 전문대의 감축이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 2주기, 3주기 등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희생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66 –

- 부실학회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이 앞장서서 부실학회에 대한 정보와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외국대학 및 외국 연구기관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부실학회의 조속한 적발에 노력할 것
-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는 34개 대학에서 81개 사업단이 와셋이나 오믹스같은 가짜 학회에 참여하였는데, 개인의 연구윤리 문제도 있지만 BK21 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나 실적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입찰비리를 저지른 부정당업체에 대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허 빼돌리기,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문제를 적발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국공립대 교수들의 연구비 편취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입시에서의 회피·제척 시스템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 국립대학의 학사관리 및 채용비리 등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병원의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보고할 것
- 국비유학생 및 정부초청 장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기여도평가, 인재활용전략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국비유학 중 저소득층 특별전형과 기술기능인전형의 지원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립대학 총장선출제도를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
- 전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당시 임용이 거부됐던 분

들이 현 정부 들어서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임명을 거절한 것인지 진상을 확인할 것

- 국립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는 임용제청판단을 여러 번 반복하는 등 무책임한 답변이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총장 장기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 통합학위제 도입을 검토할 것
-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교협·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또는 미성년 공저자가 있는 논문에 대한 미제출 학교들에 대한 조치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전형료 지출항목 중 회의비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예체능 계열 대학등록금이 명확한 산정근거없이 최대 300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대학부터 차등등록금 산정근거를 조사할 것
-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능여부와 거래카드사의 수를 조사할 것
- 학칙 등 대학 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총 7조 9,498억원에 이르는 4년제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이 학생 복지, 교육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비 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추가하여 관련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취득 시 그 고유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계도할 것
- 내진성능평가지 불법적인 하도급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

고 내진성능평가 추진 속도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것

- 대학 간호학과 실습에 있어 위험한 실습은 되도록 모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생권리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의료 및 간호학생의 안전교육은 특성에 맞게 일정시간 이상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들의 성범죄 및 갑질을 철저히 조사한 후 가해자를 징계할 필요가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대치과병원의 갑질 및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준이 미흡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방지 대책이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위원도 8명 중 7명이 회사측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산대치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 폭력, 태움, 성희롱 등에 대해서 교육부가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학동물병원이 부족하므로 해당 지역의 대학동물병원 설립을 검토할 것
-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의 의약품입찰 관련
 - － 서울대 보라매병원은 식약처의 승인 의약품간 성능과 품질에 대해 우열을 가릴 수 없어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나,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 구분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 이행실적 평가시 첨부자료 없이 만점처리를 하여 결격업체가 낙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할 것
-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별로 의견을 수렴해 방문진료, 원격진료 도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 경남지역에 로스쿨·한의대·치대가 없으므로 교육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개선책을 검토할 것
- 언어교육원의 수업료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므로 시정할 것

- 안전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수율을 점검하고 시정할 것
-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 부실집행에 대한 회수 관련 소송과정에서 내부결재 및 교육부 보고 없이 청구가액을 10억 7,000만원에서 6억 1,500만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할 것
-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 업무 중복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2017년 수원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적합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2014년 수원대에 대한 미온적인 처분으로 수원대 사태가 심각해졌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중원대학교가 교수 비위를 문제제기한 학생에 대해 이중징계를 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
- 교육부 조사로 중앙대학교가 두산건설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성균관대 또한 비슷한 의혹이 있으나 삼성과의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과별로 학생 수, 수입지출 등의 재정수지를 평가해서 교원의 상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대학의 독립책임경영 문제점을 점검할 것
- 사립대학의 감사보고서 공시방안, 감사관실 인적쇄신 등을 검토할 것
- 현재 사학감사담당관실 직원은 10여 명 정도로, 316개 사립대학을 효율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교육부 직원들의 인력 재배치, 감사원 인력 또는 교육청 인력까지 파견을 받든가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교육부와 사학혁신위는 상호 협력 하에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해야할 존재로, 교육부는 혁신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할 것

<평생·직업교육 관련>

- K-MOOC 관련하여 3년 동안 1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이수율은 9.2%에 불과, 이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문제와 참여 학생들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완책 마련할 것
- 국가 인재육성 정책의 균형적 개선, 국가정책의 직업교육 차별과 전문대학생 소외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성인비문해자의 특성상 방문교육을 통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성인비문해자 방문교육사업을 국비로 지원할 것
- 전문대교협과 협의하여 수업 연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
- 현재 청암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결정 등을 무시하여 성폭력 피해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후임자를 전임교수로 임용하고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국립국제교육원】

- 해외한국어 지원체계 브랜드 통합 관련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와는 별도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
 - 해외한국어 브랜드 통합 관련,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주관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저변을 확대하고 대학에 과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지어를 습

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바, 법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마련할 것

【국립특수교육원】

- 2018년 1학기의 경우 12개 시각장애 학교 50개, 일반학교 454명에게 395정의 점역 교과서를 배포해야 하는데, 학기 시작일보다 한 달 이상 소요된 것이 162정이고, 길면 두세 달도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점역교과서 제작 체계를 점검해볼 것
- 출판사로부터 원본파일을 받아 점자 교과서 제작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점자교과서 발행·공급제도를 개선할 것
- 교과서 점역 뿐 아니라 EBS교재 점역, 국·공립대 도서관 전공서적 점역 등 전반적인 점역 체계에 대하여 점검해 볼 것
- 2017년 개정·고시된 점자 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점역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고려할 것
- 개정된 점자규정에 맞는 점역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 국사편찬위원회는 학계의 정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오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보도나 블로그 운영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나 대응자료 배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
 - 신뢰도가 생명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무분별한 흠집내기에 적극대

응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미국·유럽·러시아·일본·중국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자료가 많은데, 해외에 소재한 우리나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해외 소재 자료에 대하여 점검해볼 것
- 법률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시행령에는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 반면, 국사편찬위원회 운영규칙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여 법에 맞게 규칙이나 규정을 정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감경하고 있는데,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할 것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분석을 할 것
- 정확한 교원 징계, 소청, 소송현황 및 소청 이행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소청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수를 늘리고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시·도교육청

【공통사항】

- 학교 화장실 화변기를 양변기로 적극적으로 교체할 것
- 지역별 학생부 정정횟수 및 징계 수위의 편차로 인한 공정성에 대한 우려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경미한 사안임에도 학폭위를 소집하거나 학폭위가 오남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사립유치원이 원아 수 허위보고 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적발되어도 시·도교육청이 보전조치만 하고 있는데, 지원금 부정수급 시 고발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 국가기관 대상 1달에 2건 이상 도청이 적발되고, 1회성 도청탐지활동으로는 색출이 불가능하도록 탐지회피 기능을 갖춘 도청기들이 일반화된 상황으로, 도청탐지설비 구축 등 보안을 철저히 해나갈 것
-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전교조 전임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은 불법이므로, 전임 휴직 허가하고 있는 교육청은 전임 휴직을 취소하는 등 조치할 것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각급 유치원 및 학교, 교육지

원청, 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

- 부설시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업체, 유치원,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와 원인규명을 할 것
-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치원과 학교 인근 공사의 경우 항상 공영감리가 이루어져 철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교육환경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 학교인접 공사장 합동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고하고, 경전철, 지하철공사 노선도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교장공모제 관련

- 교육자치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장공모제는 절차상 형평성, 투명성, 객관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대전제이므로 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개선할 것

○ 숙명여고 의혹 사건 관련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의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할 것
-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침준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고등학교 교원 및 교원 자녀의 동일학교 근무·재학의 경우 사립학교의 상피제 적용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나 지도 감독하여 개선되도록 할 것

○ 서울로의 위장전입이 다른 지역 전체 위장전입보다 많고 자치구별 통계를 보면 학군이 좋다는 곳에서만 위장전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 위장전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시 생년월일, 이름 등 불필요한 인적정보를

- 삭제하고 응시자가 공정한 면접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무상급식에 앞서 학교별 급식단가에 따른 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 초등학교 학생에게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 스쿨미투와 관련
 - 성비위 교원에 대해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의 조치 경과를 전수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스쿨 미투 발생시 실질적인 시스템 작동 방안을 마련할 것
 - 가해자 은폐 및 제보자 노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성폭력이 조사되었음.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체도를 마련할 것
 -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식을 개선하거나 지원액 증액의 노력을 할 것
 - 생활형 SOC 사업을 통한 운동장 개선사업, 도서관 신축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학교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책임 문제는 법,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
 - 폐타이어 충전재로 만든 학교운동장을 정비할 것, 도로나 시설 따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정리함.
 - 공익법인 관련법과 내규·지침·편람과의 충돌 또는 위임된 내규나 편람이 법보다 완화된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할 것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해고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개선된 학교시설물의 외부시험 장소 대여 제도가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 부족한 교원치유센터에 대한 개선 및 근무시간외 휴대전화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
- 금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우열반 편성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 교재교구비 미지급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할 것
- 신축 학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 주기를 단축시키고, 신축 학교만이라도 유해화학물질 측정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현재 대다수 학교가 설치하는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환기청정기, 기계 환기설비 설치를 우선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성공하도록 할 것
- 공조시스템 운영 등 학교 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노력할 것
- 특수학교 교사의 폭력 신고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강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한번 더 조사할 것
- 학교 안전점검 인원을 더 충원하여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것
- 유치원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수행할 것
-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기준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
-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 생리대 보급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석면제거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과 관심을 가질 것
- 도박예방 교육조례 제정 등 학생 도박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

- 광고를 수주한 언론사가 6위인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고, 공공 앱 개발에 1억 3,000만원을 쓰고 4만 7,000명이 이용한 홍보는 개선할 것
- 개인정보 동의 표시 없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학원을 점검할 것
-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2019년부터 학교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기본수당은 현금지급방식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가부 예산과 중복되므로 사업을 일원화하여 예산효율성을 높일 것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수장학회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 관련법령 개정방안, 전담TF구성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 위례별초등학교 집단전학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형평성있게 사안을 판단할 것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 내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교육청 비정규직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제고하고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리대 무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정책현황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계획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점진적으로 실행

시하여 차차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시 생년월일, 이름 등 불필요한 인적정보를 삭제하고 응시자가 공정한 면접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초등학교 학생에게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 성폭력 피해자 책임 뉘앙스 가정통신문, 연예인 폭행사건 희화화 등 교육현장에서 부적절한 인식 노출이 이어짐. 교육청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검토할 것
- 야구부 감독 금품 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운동부 춘지관행을 개선할 것
-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공익법인 관련법과 내규·지침·편람과의 충돌 또는 위임된 내규나 편람이 법보다 완화된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할 것
- 교육감이 미투 사건이 발생한 현장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 신원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 유치원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수행할 것
-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 생리대 보급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도박예방 교육조례 제정 등 학생 도박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
- 개인정보 동의 표시 없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학원을 점검할 것
-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식을 개선하거나 지원액 증액의 노력을 할 것
-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을 발표함. 무상교육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대하고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급식공급에 노력할 것
- 서흥초 야구부 해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구도심지의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가 발생할 때, 학령인구 변동을 면밀히 살펴 구도심지의 학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 2015.4.22. 전교조 교사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교육감이 법무법인 자문의견을 받아 직권으로 2018.10.1. 복직시켰는데, 자문의견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고, 복직조치는 교육신뢰를 훼손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문제를 검토할 것
- 민주시민교육 시행의 준비과정과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경기도교육청】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 생리대 보급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
-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경기도 내 초단기간 비정규직 근로형태 현황 파악 및 처우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시 생년월일, 이름 등 불필요한 인적정보를 삭제하고 응시자가 공정한 면접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초등학교 학생에게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거나 키순으로 부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 경기도 교육청의 1운동부 1감사관제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지 보고할 것
- 야간자율학습 폐지 관련
 - 야간자율학습과 저녁급식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보고할 것
 - 야간자율학습 대신 개설하는 ‘경기 꿈의 학교’ 과정이 수강인원 미달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더 많은 학생이 경기 꿈의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최근 3년간 외부인의 학교 침입은 전국적으로 249건 발생함.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성폭력이 조사되었음.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식을 개선하거나 지원액 증액의 노력

을 할 것

- 경기도의 2017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건수는 8,946건으로 2013년 대비 81% 증가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학생징계 사유 중 흡연으로 징계 받은 학생의 비율이 높으므로, 건강 교육에 흡연 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등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것
- 경기도의 최근 5년간 학생 자살률이 높음. 맞춤형 상담 확대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익법인 관련법과 내규·지침·편람과의 충돌 또는 위임된 내규나 편람이 법보다 완화된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할 것
- 경기도 외부 청렴도 문제와 관련하여, 교장, 교육감, 교육청 당국 간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운동부 감독 등과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해고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교장공모제 운영 방안 개선 TF의 회의 또는 논의 내용 공개에 대해 검토할 것
- 유치원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수행할 것
-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석면제거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과 관심을 가질 것
- 도박예방 교육조례 제정 등 학생 도박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
- 학교 인조잔디 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부상 위험이 높으므로 점검

할 것

-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다양한 교육철학이나 운영방식을 가진 대안학교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하지 않는 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경기북부교육청 분리·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문제를 검토할 것
- 민주시민교육 시행의 준비과정과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교 내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교육청 비정규직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제고하고 성비위 사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리대 무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정책현황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계획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석면철거 완료 후 의심물질이 발견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감의 의지가 잘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 것

- 예지중고등학교 관련
 -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평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 대전시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
- 2018. 10. 17. 대전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중 예지중고등학교 관련
 - 교육청의 답변은 학사과행의 책임이 교육청에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답변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보고할 것
 - 수업거부를 통한 학사과행 관련 정추위 위원에게 다 들어줄테니 교육부 앞 집회를 멈추라고 한 이유를 보고할 것
 - 무자격교사 채용으로 인한 교육법 위반을 바로 잡지 않은 이유를 보고할 것
 - 학사과행 조건이 이루어지자마자 보조금 지급중단 결정의 이유와 기준없는 편향된 결정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보고할 것
 - 무리하여 대법원상고를 한 이유를 보고할 것
- 성폭력 예방 교육용 자료, 학교폭력예방 자료 내용의 부적절성과 관련하여, 배포시 철저한 검증·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것
-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해 실태조사할 것
- 아이들이 신학기에 들어서서 잘 학습이 되도록 선생님들의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할 것
- 성비위 협의교사의 직무정지 방식이 연가가 아니라 보직해임이나 대기발령으로 할 필요가 있음. 보직해임이나 대기발령 제도가 불비하다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이 영양교사 대비 영양사가 많은 것에 대해 제도 운용을 개선할 것

- 학생 10만 명당 민원 건수 중 급식 민원 건이 대전이 가장 높음.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교 내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교육청 비정규직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제고하고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리대 무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정책현황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계획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인력충원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 미군부대와 학생, 교사 등 지역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검토할 것
-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 및 위탁채용 범위 확대 등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수영교육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정부, 시, 교육청이 힘을 합쳐 학생 전용 수영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시청, 구청 등과 함께 학교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차량 이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통행안전 방안을 수립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내년부터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빨리 확대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무상교복·고교무상교육에 관한 의견·계획을 보고할 것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것
- 비리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견, 지원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담보 대책 마련에 관한 입장, 대구시 유치원의 비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관한 입장을 보고할 것
- 대구 평화의 소녀상을 중학생이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 사교육비가 서울에 이어 2위, 학원비 인상률도 전국 3위임. 교육청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원비 정책에 개입하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킬 것
- 영남공고 관련
 - 교사 간 연애편지, 학기 중 출산 알렸다는 각서, 이사장과 교장의 교권 침해 등 영남공고의 비위행위 의혹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 특정과목 전교생의 시험 결과가 전산시스템에 삭제된 것에 관해 교육청에서 감독권을 발휘할 것

-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대구교육청·영남공고 특별감사 자료와 처분 결과, 학교의 조치 사항 이행 결과 등을 제출하고 영남공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
-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경신고가 전환 이후에 학교의 인가 학급수가 12학급에서 9학급으로 감소하였는데 학교와 학생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진로상담 교사 선발 시 대구교육청만 교육청에서 활동한 경력에 배점을 주고 있는 것은 제도 개선할 것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것
- 교권 침해 관련
 -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이후에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을 보고할 것
 -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교권 담당변호사 채용을 확대하여 교원의 교권 침해 해결을 도와줄 것
- 학교 미투 대응에 있어 제보학생의 비밀보호, 접촉금지 등이 지켜지도록 할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강원도교육청】

- 학교 내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교육청 비정규직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제고하고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리대 무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정책현황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계획을 보고할 것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은폐 논란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유치원, 유치원 놀이시설, 초등학교, 초등학교 놀이시설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어린이활동공간 5,102개 중 787개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이 시설들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것
- 학생 자살과 관련한 강원도 교육청의 연구 및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학생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최근 3년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지출은 총 140억으로 전국 1위이나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은 27.7%로 최하위임.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
- 최근 3년간 초중고 통폐합 학교가 늘어나면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통학버스 내 안전시스템의 예산 확보나 실행 실적을 관리할 것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것
- 다른 시도에 비해 라돈 기준치 이상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학교가 많은데 다른 예산보다 안전 예산을 더 배정하고, 교실을 위층에 배치, 측정기 설치, 환기 등을 실시할 것
- 역사 보조교재 작성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으로 신뢰성 있게 작성할 것
- 초등학교 교원 수급을 위해 지역 교대 총장들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지역인재 채용방법을 만들 것
- 강원도는 학생 1만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높고 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부나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교사 연수 프로그램 중 통일안보교육의 내용이 시대변화에 맞게 바뀔 필요. 반공교육, 상대에 대한 적개감만 불러일으키는 교육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검토할 것
- 강원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특정 학년에 1개 학급만 있는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중 학급교체가 가능하지 않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거나 피해학생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
-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순회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
- 지역별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무상교복 지원에 관심을 가질 것
-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실시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경상북도교육청】

- 소방차 진입 장애 학교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 학교 내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교육청 비정규직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제고하고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리대 무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정책현황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계획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인력충원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내년부터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빨리 확대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무상교복·고교무상교육에 관한 의견·계획을 보고할 것
- 비리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견, 지원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담보 대책 마련에 관한 입장을 보고할 것
-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것
- 영광학교 현지지원 장학과정에서 발생한 장학관과 장학사의 우려스러운 발언에 대해 조사할 것
- 사서교사를 정원내로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안을 제출할 것
- 코딩 교육을 위한 기자재 확보, 전문교사 충원 등을 통하여 아이들이 정보화시대에 선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
-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순회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인 1%를 채울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 통학버스 내 안전시스템의 예산 확보나 실행 실적을 관리할 것

【충청남도교육청】

- 소방차 진입 장애 학교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 학교 내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교육청 비정규직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제고하고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리대 무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정책현황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계획을 보고할 것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인력충원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충남의 학교 내 상담시설(Wee클래스) 설치율은 31.3%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상담인력 충원 등 Wee클래스 및 Wee프로젝트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상담시설로 운영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성범죄 교원 관련
 - 엄격한 징계기준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징계위원회 구성에 유념할 것
 -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모든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 의향이 있는지 보고할 것
 -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것
- 다른 시도에 비해 라돈 기준치 이상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학교가 많은데 다른 예산보다 안전 예산을 더 배정하고, 교실을 위층에 배치, 측정기 설치, 환기 등을 실시할 것
-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네이밍에 관해 연구할 것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충청북도교육청】

- 학교 내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교육청 비정규직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제고하고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리대 무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정책현황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계획을 보고할 것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인력충원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충북의 학교 내 상담시설(Wee클래스) 설치율은 20.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상담인력 충원 등 Wee클래스 및 Wee프로젝트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상담시설로 운영할 것
- 성범죄 교원 관련
 -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모든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 의향이 있는지 보고할 것
 -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시 사항 입력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공시 사항이 공시되도록 할 것
- 다른 시도에 비해 라돈 기준치 이상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학교가 많은데 다른 예산보다 안전 예산을 더 배정하고, 교실을 위층에 배치, 측정기 설치, 환기 등을 실시할 것
- 장애학생 전국체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조치할 것
- 1,500만원을 지출하여 만든 ‘위드 다문화’앱은 이용자가 19명임. 교육청에서 앱을 만들 때 불필요한 앱은 사전에 점검하고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
-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원인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릴 것
- 충북교육청 인수위원이 충북교육청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불공정성,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을 고려할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을 검토할 것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를 보고할 것
-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것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것
- 학생의 여교사 신체 일부 불법 촬영 및 유포 관련
 -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 진술 부여 등 법에서 정한 적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 정당성을 확보할 것
 - 교사들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배임·회계부정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개선할 것,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할 것
- 거제 아파트 입주민 초등학생 통학편의 지원금 변경 재협약으로 인

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방안을 보고할 것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보편적 가치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비교육적인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재고할 것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상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것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보고할 것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보고할 것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추진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 가포고등학교를 창원 북면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부재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것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할 것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교육청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보고할 것
- 내년에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무상교복에도 관심을 가질 것

【광주광역시교육청】

-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고 무상교복 추진시 편한 교복이 적용되도록 할 것
- 교육청 비정규직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제고하고 성비위 공무원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리대 무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정책현황 및 생리대 자판기 설치계획을 보고할 것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을 검토할 것
- 성비위 신고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 사실이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경우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남북교육 교류사업 관련, 북한 방문시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것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것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할 것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할 것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상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것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보고할 것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할 것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보고할 것
- 지역별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무상교복 지원에 관심을 가질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을 검토할 것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것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것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할 것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할 것
- 2017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2%인데 울산은 2.06%로 상당히 떨어지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이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함. 두 부분을 개선할 것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것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보고할 것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보고할 것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후 결과를 보고할 것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보고할 것
- 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명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보고하고, 빠른 시간안에 급식실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부산형 돌봄자람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옐로우카펫 설치 장소 확대와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할 것
-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이용자 중심·국가차원 통합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
-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을 검토할 것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보급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할 것
-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것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것
-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평가의 공

정성·신뢰성 문제, 경제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 2015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측면에서 도입에 신중할 것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할 것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상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에너지 절약성치가 공공기관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혹한기나 혹서기 교실 기준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것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보고할 것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할 것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교육청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보고할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고사관리 감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농촌 도서지역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부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을 검토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를 보고할 것
-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것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것
- 목포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할 것
- 다문화학생의 수가 많으므로 교육부와 상의하여 선도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것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시 법적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이 실행되도록 연구할 것
- 문태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경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할 것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상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것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보고할 것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보고할 것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할 것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교육청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보고할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장애인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을 검토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를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의 시행을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교육감·노동조합·피고발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설치와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명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을 보고하고 빠른 시간안에 급식실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것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것
- 전북의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이 66.8%로 전국 평균 96%에 비해 유독 낮은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것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할 것
- 다문화학생의 수가 많으므로 교육부와 상의하여 선도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것
-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가정폭력 발생시 법적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이 실행되도록 연구할 것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할 것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것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보고할 것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할 것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교육청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
- 한국사 보조교재의 내용이 전교조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에 관한 의견을 보고할 것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보고할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소액계약에 관해서도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임차료가 무료이거나 낮은 공공시설을 적극 이용해 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
-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의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을 검토

토할 것

-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를 보고할 것
-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관련
 -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것
 -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것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할 것
-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문제, 경제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 2015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측면에서 도입에 신중할 것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할 것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것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보고할 것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

사 후 결과를 보고할 것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보고할 것
- 지역별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무상교복 지원에 관심을 가질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7개 직종별 조치현황, 그 외 정규직전환 예외직종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할 것
- 학교급식실 급식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 배치를 최소 법정 인력배치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 세종시는 2030년까지 총 168개 신설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개발과 미래수요를 고려한 학교설립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위해 미래 수요에 대비할 것
-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방침을 마련할 것
-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을 검토할 것
-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
-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법정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로, 사립법인의 법정부담

금 납부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고할 것
-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제도의 재검토 및 개선할 것, 배치해야 하는 경우 소양교육을 할 것
 - 학교 차원에서도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것
- 자원봉사인력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나 인력 내실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할 것
-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학생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편한 교복을 추진할 것
- ‘처음학교로’ 미참여유치원의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초중고교의 골프연습장 활용방안을 보고할 것
- 전교조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할 것
-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보고할 것
-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타 시도교육청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에 비해 세종시는 공기교환장치를 선제적으로 설치한 이유를 보고할 것
-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필요.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교육부와 협의여부, 향후 추진계획 여부를 보고할 것
- 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계획 여부 및 교육부 종합계획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할 것

3.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공통사항】

- 유학생 언어기준 충족률이 저조하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학교에 무보수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급여를 수령하는 등 관리에 허점이 존재하므로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부실 학회 및 학술지 참석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원금 환수 및 징계 방안을 마련하며 부실 학회 및 학술지를 검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모든 기숙사가 매 학기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기숙사생들의 훈련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 본인이나 동료 교직원의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적발해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논문저자의 조건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정신건강센터 상담, 검사 및 치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을 확대할 것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 신상을 기재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
-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
- 성비위 사건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학생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내진성능평가지 불법적인 하도급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내진성능평가 추진 속도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것
- 청소근로자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비 편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교수들의 부패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전형료 지출항목 중 회의비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식비는 교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학평의원회를 건설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의 개선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북대학교】

- 학교 인근 주민들과 기숙사 수용인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 학기 기숙사 수용인원 결정에 있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강의에서 고인을 비하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008년 권력형 성비위를 저지른 교수가 최근 보직교수에 임명된 것과 관련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고 재발방지 및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상주캠퍼스 통합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이

행하고 상주캠퍼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전형료 산정시 학교건물 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
-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경북대발전기금 이사들 중 대부분은 총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을 개선할 것
-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육 자료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전북대학교】

- 낙후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강의에서 고인을 비하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년도 시험지 유출 등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지역인재 전형의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3년 재학자가 아닌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했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을 해당 지역에서 다닌 학생들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9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을 변경·번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학교 내 갑질 및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가 미흡한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내부고발자들이 부담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부산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학내 성범죄 문제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육 자료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양산캠퍼스 개발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
- 예체능 계열의 등록금이 비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강원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봉사프로그램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것

-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육 자료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경상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전남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창업펀드 투자 실적이 저조하므로 광주·전남지역 대학 연합으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투자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의 통합 이후 여수캠퍼스가 고사 위기에 처하고 지역경제도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향후 학과 이전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등을 포함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것

【충남대학교】

- 학교 현장직(운전원) 공무원의 주말 근무에 대하여 혹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 복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교육 자료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로 이를 시정할 것

- 소속 교원이 허위로 겸직허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충북대학교】

- 자체감사에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시설 안전 문제를 개선할 것
- 허술한 학위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제주대학교】

- 성희롱, 폭언, 서적 강매, 특허 도용 등의 갑질을 저지른 모 교수의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징계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MOOC 강의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대학평의회를 설치할 것
-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
- 현재 방치되고 있는 舊남부학습센터를 시민의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검토할 것
-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것

【서울교육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할 것
- 향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할 것
- 기숙사 성희롱 낙서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수가 자녀 대입전형에 제자의 석사논문을 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교대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임용시험과의 괴리가 크고 집필고사의 비중이 과도하며 실기능력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신입생이 다양한 관점에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별 교원 쏠림을 고려할 것
- 해외 한국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수업을 위한 교대의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전공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할 것
- 향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할 것

-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아카데미는 전임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실습 시간을 축소하여 진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바 있는데 향후 부실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학사관리를 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
- 학생 및 조교등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원 가족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채용된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숙사 식권 강매행위 및 기숙사비, 식비 일시납입은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활용해서 학회지에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교내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것
- VR기기를 이용한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검토할 것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향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할 것
- 총장 선출 제도와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학내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마련할 것
-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 협회나 연구회 등으로 우회하여 체결한

연구용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

- 서울대 팩트체크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서울대가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내실있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불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갑질 교수에게 피해를 받은 학생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노력을 기울이고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마련할 것
- 특허권 양도를 산학협력단 부장의 전결사항으로 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특허권을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가 공개한 에너지다소비건물에 6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것
- 성비위를 저지른 수의대 교수를 솜방망이 징계한 사건과 관련하여 은폐시도 의혹을 조사하고 엄중히 징계할 것
- 대입전형을 수능 1년 6개월전에 발표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하여 교육부의 수능 입시 30% 확대 권고를 반영할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HK교수는 총장선출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안식년 제도가 없는 등 HK교수를 전임교원과 차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험성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 서울대인권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는 젠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것
- 여성교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규장각 내 문화재 자료의 보존상태가 열악하므로 소유권 문제와 문화재 수리보존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이사회 회의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또는 녹취록)을 작성할 것
- 서울대에서 학위를 받은 국내 및 외국 학생의 해외·국내 취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것
- 가처분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들에 대한 징계 취소 및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
- 사외이사 제도가 변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
- 실험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계열별 등록금 차등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등록금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이공계 지원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 인권센터의 1대1 상담교육 중 거의 대부분은 외부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피신고자는 외부기관에서 지정된 특정 강사에게 4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강사의 전문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 차입금 이자 부담과 관련하여 대책을 검토할 것
- 청소근로자의 인원충원과 직접고용을 통해 깨끗한 학습공간을 만들고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9명 중 7명이 학교측 인사이고 노사관계 전문가나 노동계 추천인사는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을 재검토 할 것
- 자체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정산하지 않거나 연구실적물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연구비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하는 등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교차원에서 징계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 시민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민주화를 기념할만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동문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많으므로 이를 반영할 것
- 계열별 등록금 차등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등록금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서관 확충 및 우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공통사항】

-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간호사 대기 순번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 응급실 등 병원 내 폭행·난동이 급증하여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보안 지침 및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할 것
- 저조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를 개선할 것
- 병원 내 다양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할 것
- 병리학이나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가 아예 없는 병원들도 있는 등 일부분야의 전공의 부족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대학병원이 광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책을 강구할 것
- 주 52시간 근무체계에 따른 병원내 인력수급, 환자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술보조인력의 불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분쟁을 대비하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 근로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통역서비스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찾아가는 의료-방문의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이 주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

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
- 허위 의견서 작성을 강제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
- 응급실 등 병원 내 폭행·난동이 급증하여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보안 지침 및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할 것
-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본원 비정규직 지원자에 대하여 모집 공고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출신학교나 성별에 차등을 주는 등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직원의 자녀 등 가족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
- 국정농단 및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한 도의적은 책임을 질 것
-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조한 서비스평가 결과를 개선할 것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내방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환자의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이지케어텍이 상장될 경우 의대 교수 및 가족등 내부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대 교수 및 가족등 내부자들이 이지케어텍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병원 내부자들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
- 당기순이익 이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은 병원이 과도한 시설투자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순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의약품 입찰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다른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정밀의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 지역 거점 공공병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매년 적자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진료비 감면 규모 축소할 것

【부산대학교병원】

-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4개월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조사할 것
-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방문진료 및 원격진료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부채가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면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할 것

【강원대학교병원】

- HIV 및 결핵 감염자를 검사 없이 수술하고 자격이 없는 수술보조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들의 성범죄 및 갑질을 철저히 조사한 후 가해자를 징계할 필요가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간호사 퇴직률이 다른 국립대병원보다도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전북대학교병원】

-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원 전현직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원과정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거짓증언, 허위보고 및 조직적 은폐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충남대학교병원】

-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

【경상대학교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필요

【경북대학교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

【전남대학교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
- 방문진료 및 원격진료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충북대학교병원】

- 의료중재원의 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불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대학교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여성 응시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등 직원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상임이사,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

5.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퇴직월 보수 관련 내부 규정을 기재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관련
 - 현재 재단은 폐쇄 뿐만 아니라 폐지 대학 전반에 대해 지원·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로 수정할 필요
 - 폐교 대학의 부채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설득 및 관련 예산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앞으로 마련될 법적 근거 하에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청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 행복기숙사 관련
 - 수도권 및 사립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 및 기숙사 수가 부족한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더욱 많은 기숙사를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
 -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
 - 대학가 인근 지역의 기숙사 건립은 기존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학가와 거리가 있더라도 학생들의 등학교가 용이한 지역을 행복기숙사 입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숙사에서 재해 대피 훈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숙사 사업 외에도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강구할 것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구축한다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 모집관련 허위·과장 광고 협력 대응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독학학위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전공 수를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문해인구가 311만명에 이르고 농산어촌이 대도시에 비해 더 많으며,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인 상황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실있는 문해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KOCW의 중복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청, 의회 등에 평생교육 직렬 배치 등 공공성, 전문성 및 연속성의 측면에서 평생교육사의 안정적 처우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의지가 보여 질 수 있도록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오류 사항 발굴 후 재확인 및 협의, 오류의 지역별·단계별·종류별 목표 설정 및 실행방안 수립·추진, 전담인력의 확충,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재단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할 것

-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 부실집행에 대한 회수 관련 소송과정에서 내부결재 및 교육부 보고 없이 청구가액을 10억 7,000만원에서 6억 1,500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유튜브를 통한 동북아역사 독도 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대마도, 간도, 백두산 문제에 대한 연구, 홍보 등을 강화할 것
- 일본의 독도 침탈논리를 봉쇄할 수 있도록 일본내 독도연구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상시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발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할 것
- 동아시아 영토·해양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예산 등 독도 관련 예산이 감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퇴직월 보수 관련 내부규정을 기재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사, 학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교과서 오류 발견 또는 접수 시 교육부에 조속히 통보하여 신속하게 시정할 것
- 디지털교과서 관련 인프라 및 스마트기기 보급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학생들의 학력이나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 현재 디지털교과서 적용 중인 3개 교과 외 추가로 다른 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검토할 것
- 스마트기기 중독, 시력 저하, 사회성 약화, 뇌기능 저하 등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것

- 3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원시적 오류가 반복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4세대 개편 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30시간 선도교원 연수는 내실있는 교육 및 사교육 방지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선할 것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통계성 자료 처리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 미래교육에 대해서 축적된 자료 등을 향후 설치될 미래교육위원회에 충실히 보고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한국연구재단】

-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퇴직월 보수 관련 내부 규정을 기재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실학회 명단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하여 부실학회 및 부실학술지의 창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인문사회 분야 R&D 예산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추가 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인문사회분야 R&D 예산집행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인문학진흥사무국의 기능이 확대된 만큼 관리비의 지원 등 충실한 업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대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 관련하여 엄격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퇴직월 보수 관련 내부 규정을 기재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자금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자금 중복지원금 환수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미환수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4년제 대학 졸업 후 전문대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한 완화 대책, 전문대 수업 연한 다양화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생활비 대출이 안고 있는 리스크도 학생들이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대출 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특별히 연체자가 많은 학교를 추출하여 찾아가는 상담 혹은 컨설팅 프로그램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생활비 대출을 받고 휴학하는 등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방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는 시급히 해결할 문제이므로,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의 5천명 수용인원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최근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졸업 후 3년 이내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 상환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는 체계를 보다 완화하는 것을 검

토할 것

- 성동구에 건립 추진 중인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 현재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부채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3개월 초과 연체 시 9%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미취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늦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학생 중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허용되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1회 추가연장을 일반 학생으로 확대하고, 이미 거치기간을 지나 연체금이 쌓이고 있는 채무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급격한 금리인상 지양 등 대학생들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배려할 것
- 과거 고금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전환대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대학현장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센터를 확충할 것
-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응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미신청자가 상당하므로, 대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을 수행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강화할 것
- 멘토의 대도시 거주 등에 따라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에서 시골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 선정률이 낮은 것은 형평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멘토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 또는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

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분석작업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근로장학금 집행 관련, 교외근로장학금은 초과 집행되었으나, 교내근로는 집행 잔액 존재. 근로유형별 집행 계획 사전 검토가 미비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이용자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재 5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3개월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유학 및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6개월 이상 출국자에 대해서 신고와 상환 의무 안내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출국자로 확대할 것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자 면제를 검토할 것
- 기숙사 사업 외에도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서울 뿐만 아니라 의정부 등 새로운 대학이 많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전문대 학생에 대한 기숙사를 오픈할 것
- 근로장학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소득분위 산정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초·중등교육에서도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 파란사다리 사업의 효과성 및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감안하면 일반금융기관의 연체가산금 부과 방식과 비교하여 한국장학재단은 일률적으로 높은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보증부학자금대출 이자율이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으므로 전환대출을 통해 채무자부담을 경감시킬 것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인력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해외 한국학지원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해외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국의 문화 위상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시설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관련
 - 외국인 기혼자를 위한 가족 기숙사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 2인 이상 1실을 축소하고 1인 1실 형태 기숙사를 늘려나갈 방안을 모색할 것
 - 졸업생에게도 일정기간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학대학원 입학생 국적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서각 소장자료 보존·관리 관련
 - 소장자료 20만건에 대하여 연간 1만건 가량의 상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태조사 완료까지 20년이 소요될 경우 상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될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소장자료 중 4,822건의 자료훼손이 확인되고 그 중 60건은 주요 문화유산인바,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소장자료에 대한 상태조사, 보존처리를 위한 인력 등의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 서책 등 소장자료의 보존, 활용을 위하여 규장각, 중앙박물관과 통합적으로 실태조사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규정에 위배된 업무처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관의 갑질 관행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할 것

【한국고전번역원】

- 고전번역교육원의 실질적인 인재 육성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번역과 편찬 등 사업의 성과의 질을 올리고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협동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무인력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한문학, 역사학 등 인문사회계 대학원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AI 활용, 전문가 외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등을 통하여 승정원 일기 등의 번역사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전번역대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매년 증가하는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생의 우울증, 자살 등 심리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검정고시생에 대한 대체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수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전북대에서 수시 전형에 임박하여 두 차례 수시 전형을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고, 대교협이 시정권고 및 유예기간 설정 등에서 일관성이 없는 행태를 보였는바, 향후 사전예고제 및 일관성을 유지할 것
-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학생 수를 늘리는 교육부의 시스템에 따라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둔

유학생 증가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또는 미성년 공저자가 있는 논문에 대한 미제출 학교들에 대한 조치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교협이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의 합의를 기초로 한 시간강사법이 정기회에 통과되면,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편법적인 인건비 절감행태를 감독하는 한편, 재정지원, 대통령령 정비 등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지역인재 기준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더 완화하는 것 모두가 지역인재전형의 특별전형으로 한 취지에 반함. 교육부는 전북대와 같은 지역인재전형이 지방대육성법의 취지인 것인지 검토하여 대교협에 안내하고 대교협은 이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할 것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등록금 수입의 지속적 감소 및 인건비·운영비 등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전문대학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매년 증가하는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취업난에 따라 확대되는 유턴 입학자를 배려하기 위한 수업 연한, 장학금 제도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한국교직원공제회】

-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퇴직월 보수 관련 내부 규정을 기재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문서 위·변조에 취약한 대용진단 계약을 폐지하는 등 보험가입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서류가 조작된지 모르는 선의의 가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담보할 것
- S2B 학교장터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중 절반 가량인 108억이 구매자인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업체 구매 쿠퍼제 도입, 지역업체 검색 카테고리 구분 등 S2B 도입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령상 공매도는 가능하나 지양할 것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총연장이 36.6%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는바 신공항하이웨이 지분의 45.0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교원나라 B2B 관련 결제조건, 지역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연인 외 사학법인 단체 등도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할 것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율 제고 및 환수불가능 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유치원 직원 채용시 사학연금법상 가입대상이 맞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 서식 등을 보완 조치할 것
- 급여 미청구 및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연금 찾아주기”업무에 보다 적극성을 기할 것
- 주식의결권행사 결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좀 더 많은 종목을 주식의결권행사심의회나 자금운용관리단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식의결권행사를 함에 있어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 사학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거래 금융기관 선정 시 미도입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사학연금의 주식 대여업무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의 노력은 지양할 것
- 납부비용 대비 과도한 수혜를 받는 사례가 존재하는바, 연금기금 고갈 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개인부담률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전문성 제고 및 투자다변화 등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예산집행 대책을 마련할 것

IV. 국정감사 증인 · 참고인 현황

1. 기관 증인

가. 기관증인 총괄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기관증인(명)
1	교육부	유은혜	20
2	국사편찬위원회	조 광	2
3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숙	1
4	중앙교육연수원	배성근	1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근우	1
6	국립국제교육원	송기동	1
7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박성민	1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박찬욱(직무대리)	2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조동성	2
10	강원대학교	김현영	2
11	경북대학교	김상동	2
12	경상대학교	이상경	2
13	부산대학교	전호환	2
14	전남대학교	정병석	2
15	전북대학교	김재민(직무대리)	2
16	제주대학교	송석언	2
17	충남대학교	오덕성	2
18	충북대학교	김수갑	2
19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2
20	서울교육대학교	김경성	2
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2
2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6
23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4
24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4
25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4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기관증인(명)
26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4
27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옥희	4
28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4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4
30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8
31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4
32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4
33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4
34	전라남도교육청	장석웅	4
35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4
36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4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5
38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4
39	강원대학교병원	이승준	2
40	경북대학교병원	정호영	2
41	경상대학교병원	신희석	2
42	부산대학교병원	이창훈	2
43	서울대학교병원	서창석	2
44	전남대학교병원	이삼용	2
45	전북대학교병원	조남천	2
46	제주대학교병원	주승재	2
47	충남대학교병원	송민호	2
48	충북대학교병원	한헌석	2
4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엄홍식	2
5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신상훈	2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허성주	2
5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중훈	3
5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석수	3
54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3
55	한국고전번역원	신승운	3
56	동북아역사재단	김도형	3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기관증인(명)
57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욱	3
58	한국사학진흥재단	지병문	4
5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3
60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3
6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호성	3
6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3
63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3
합계			193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피감기관	증인명	불출석사유
10.11(목)	교육부	김청현 감사관	o 출장
10.29(월)	전북교육청	김승환 전북교육감	o 해외출장

다. 기관증인 추가 채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일반 증인 · 참고인

가. 일반 증인 · 참고인의 의결 및 출석 현황

일 자 (피감 기관)	출 석 의 결			불 출 석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2018.10.11.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3	4	7	—	3	3
2018.10.15. (서울시 교육청 등)	—	4	4	—	1	1
2018.10.17. (대전시 교육청 등)	—	1	1	—	1	1
2018.10.19. (경남 교육청 등)	2	3	5	1	—	1
2018.10.29. (교육 분야 종합 감사)	3	1	4	1	—	1
총 계	8	13	21	2	5	7

나. 출석 증인 및 참고인 현황

(총 21명 : 증인 8명, 참고인 13명)

<출석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 기관	출석요구 일자	신문내용
1	김영란	대입제도공론화 위원회 위원장	10.1	교육부	10.11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침해 여부 확인
2	이희진	대입제도공론화 위원회 위원	10.1	교육부	10.11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침해 여부 확인
3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단장	10.1	교육부	10.11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침해 여부 확인
4	이승열	거제옥포고등학 교 교장	10.1	경남 교육청	10.19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재협약 논란 관련 진위 여부 확인
5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10.19	교육부	10.29	사립유치원 논란 관련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 기관	출석요구 일자	신문내용
6	이중렬	위례별초등학교 교장	10.19	교육부	10.29	페미니스트 교사 등에 대한 질의

<출석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 기관	출석 일자	신문내용
1	정기원	한국대안교육기 관연합회 이사장	10.1	교육부	10.11	대안교육 현황 및 대안교육 특별법 제정 필요성
2	이지영	상도유치원 학부모	10.1	서울시 교육청	10.15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학생안전 등에 대한 의견
3	유옥현	동작구청 공무원	10.1	서울시 교육청	10.15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안전관리 및 과실 여부
4	김광미	상도유치원 원장	10.1	서울시 교육청	10.15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안전관리 및 과실 여부
5	황덕찬	거제시청 공무원	10.1	경남 교육청	10.19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재협약 논란 관련 진위 여부 확인
6	신윤경	외간초등학교 학부모	10.1	경남 교육청	10.19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재협약 논란 관련 진위여부 확인
7	이상훈	거제시청 공무원	10.11	경남 교육청	10.19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재협약 논란 관련 진위여부 확인
8	김용임	리라자연유치원 원장	10.19	교육부	10.29	사립유치원 논란 관련

다. 불출석 중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 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불출석 사 유
1	이철수	다원종합건 설 대표	10.1	경남 교육청	10.19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재협약 논란 관련 진위여부 확인	병원진료
2	정화순	前 다원종합건 설 대표	10.19	경남 교육청	10.29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재협약 논란 관련 진위여부 확인	해외출장